# 행정중심복합도시
# 건설기본계획

2006. 7

건 설 교 통 부

# 목 차

Ⅰ. 건설기본계획의 개요 ····· 1
1. 계획의 개요 ····· 2
2. 계획의 범위 ····· 4
3. 계획의 수립체계 ····· 6
4. 도시건설 추진배경 ····· 8
5. 도시건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10

Ⅱ. 도시건설 여건 분석 ····· 19
1. 주요 관련계획 ····· 20
2. 지역 여건 ····· 22
3. 종합 분석 ····· 33

Ⅲ.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 34
1. 도시건설의 정책목표 ····· 35
2. 도시건설의 이념 ····· 36
3.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37

Ⅳ. 도시 공간구조 ····· 39
1. 도시기능 설정 및 인구구상 ····· 40
2. 활력있는 도시구조 ····· 44
3. 생활권 계획 ····· 50
4. 토지이용의 기본방향 ····· 54
5. 도시건설지표 ····· 57

Ⅴ. 부문별 도시 개발방향 ····· 60
1.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지계획 ····· 61
2. 환경친화적인 생태순환도시 ····· 64

# 목 차

3. 아름답고 개성있는 녹색도시 조성 ····· 68
4. 편리하고 인간중심적인 교통체계 ····· 75
5. 시민친화적이며 효율적인 청사 배치 ····· 81
6. 수준높은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기관 배치 ····· 86
7. 다양하고 질 높은 선진 교육환경 조성 ····· 87
8. 품격높고 풍요로운 문화인프라 구축 ····· 90
9.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복지인프라 구축 ····· 94
10. 안전한 도시를 위한 방호 및 방재계획 ····· 97
11. 미래지향적인 첨단 정보·통신계획 ····· 101
12.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 ····· 104
13. 경제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조성 ····· 106

Ⅵ. 사업추진방안 ····· 111
1. 사업추진체계 ····· 112
2. 단계적 개발방안 ····· 115
3. 건설비용 및 재원조달방안 ····· 117
4. 보상 및 주민지원대책 ····· 119
5. 주변지역 관리 및 지원방향 ····· 121
6.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대책····· 123
7. 건설근로자 및 건설자재 수급대책 ····· 124
8.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 125

Ⅶ. 개발계획의 수립방향 ····· 126
1. 개발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 127
2. 부문별 개발계획 수립방향 ····· 129

# Ⅰ. 건설기본계획의 개요

1. 계획의 개요
2. 계획의 범위
3. 계획의 수립체계
4. 도시건설 추진배경
5. 도시건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1. 계획의 개요

## 1) 계획의 의의

□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을 제시

□ 미래지향적인 도시모델을 제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발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의 지침을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에서 여러 계획 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기본원칙을 수립

□ 도시개념 국제공모의 당선작 내용을 반영하여 새롭고 품격 높은 세계적 도시건설의 모범을 제시

## 2) 법적 근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9조

□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3) 계획의 성격

□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 향후 수립될 개발계획·실시계획 등의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

### 4) 계획의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도시건설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전체적인 사업범위 및 추진일정을 설명하고 도시건설의 기본이념을 제시

○ 도시개발의 부문별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행정·자족도시,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문화·정보도시의 조성방안을 수립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체계를 정립하고 단계적 개발방안 및 재원조달방안, 보상 및 주민지원대책 등을 수립

○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문별 개발계획의 수립원칙 등 하위계획 수립방향을 제시

□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사업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개요,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배치방향, 도시교통 및 경관・환경보존의 기본방향,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도로・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재원조달방안,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특별법 제19조)

○ 도시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도시정보화의 기본방향, 문화재보호의 기본방향, 도시방호 및 방재의 기본방향(동법 시행령 제11조)

## 2. 계획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및 목표인구

□ 특별법이 제정된 '05년을 기준으로, 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추고 성숙단계에 이르는 '30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계획을 수립

□ 단계적으로 인구유입방안을 마련하되, 도시가 성숙되어 개발이 완료되는 '30년에는 최종적으로 50만인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 수도권 인구분산효과,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능 확보, 충청권내 도시체계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구규모를 50만인으로 설정

### 2) 공간적 범위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및 시가지 조성을 위해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예정지역을 지정하여 계획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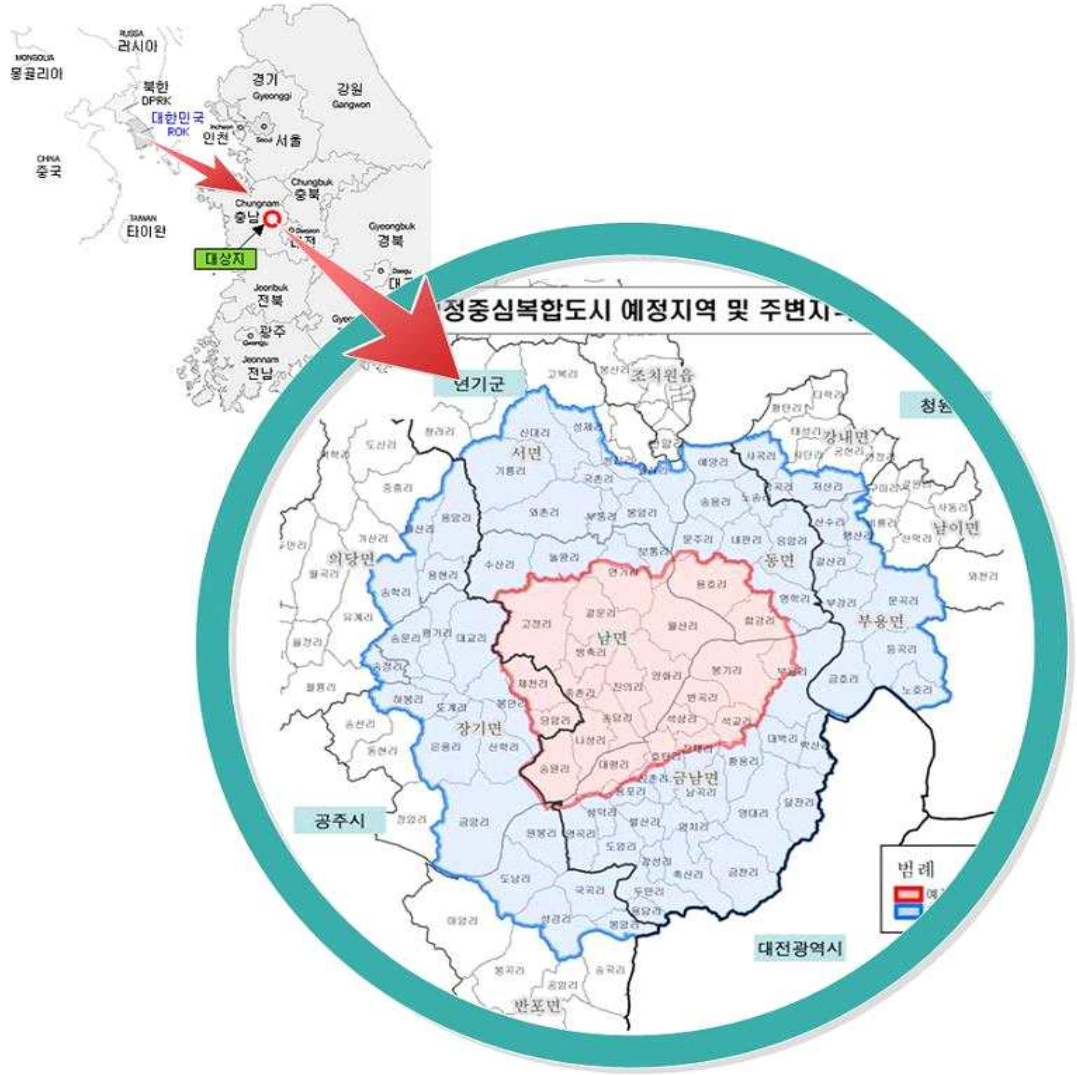
○ 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일원,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원의 약 73.14㎢가 대상

○ 중심부에 원수산(254m)과 전월산(260m)이 있고, 금강과 미호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대전과 청주에서 각 10㎞ 거리에 위치

□ 예정지역 개발의 영향으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획에 포함

○ 주변지역은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4~5㎞ 범위내 지역으로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및 충청북도 청원군 일원의 약 223.77㎢가 대상

《 공간적 범위 》




| | 예 정 지 역 | 주 변 지 역 |
|---|---|---|
| 행정 구역 | 2개 시 · 군 5개면 33개리<br>- 연기군 : 남 · 금남 · 동면<br>- 공주시 : 장기 · 반포면 | 3개 시 · 군 9개면 74개리<br>- 연기군 : 남 · 금남 · 동 · 서면<br>- 공주시 : 장기 · 반포 · 의당면<br>- 청원군 : 강내 · 부용면 |
| 면적 | 약 73.14㎢(2,212만평)<br>- 연기군 : 68.24㎢ (93.3%)<br>- 공주시 : 4.90㎢ ( 6.7%) | 약 223.77㎢(6,769만평)<br>- 연기군 : 118.62㎢ (53.0%)<br>- 공주시 : 71.73㎢ (32.1%)<br>- 청원군 : 33.42㎢ (14.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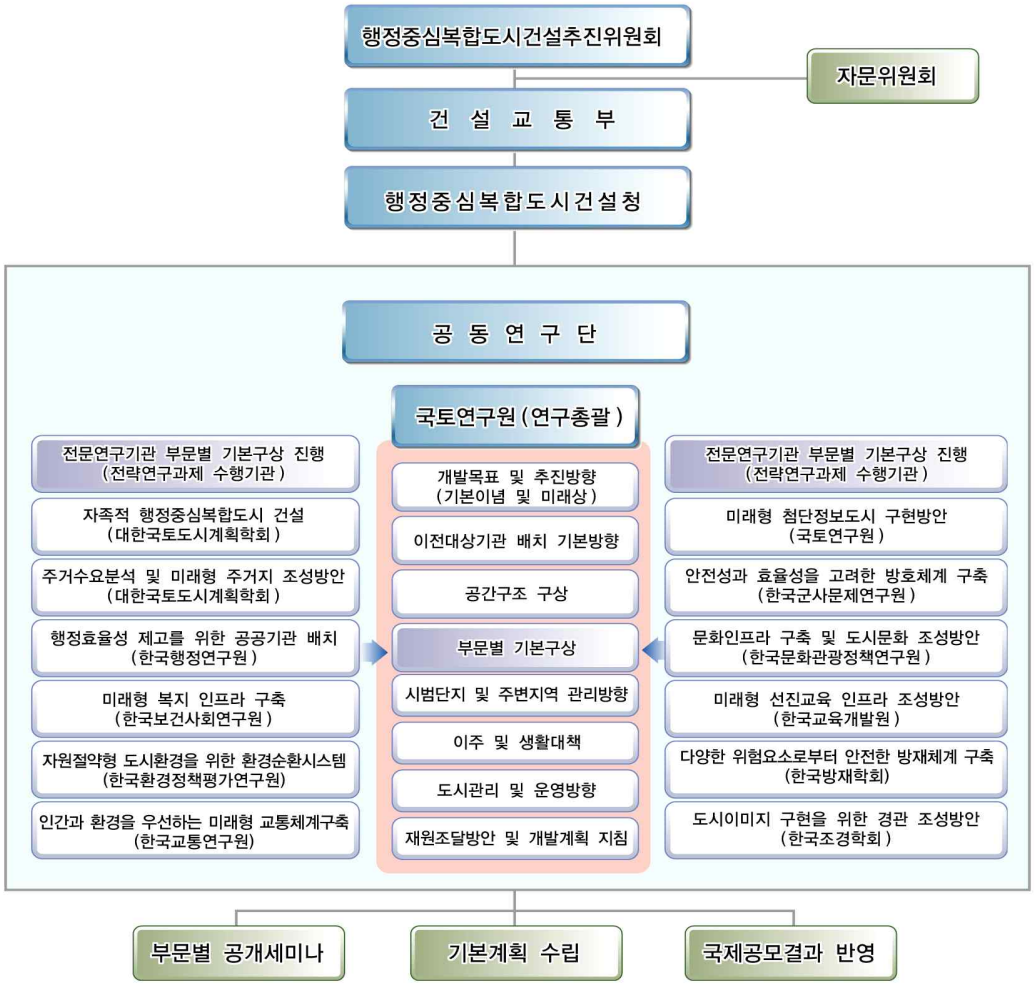
## 3. 계획의 수립체계

□ 다양한 관련분야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및 관련학회 등 총 11개 기관이 건설기본계획 수립연구에 참여

○ 주요 연구내용은 국제공모관리, 기본구상 총괄, 부문별 전략과제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

○ 국제공모 결과를 통해 도출된 도시개념 및 아이디어를 토대로 기본구상 및 주요 부문별 적용방향을 마련

《 건설기본계획 수립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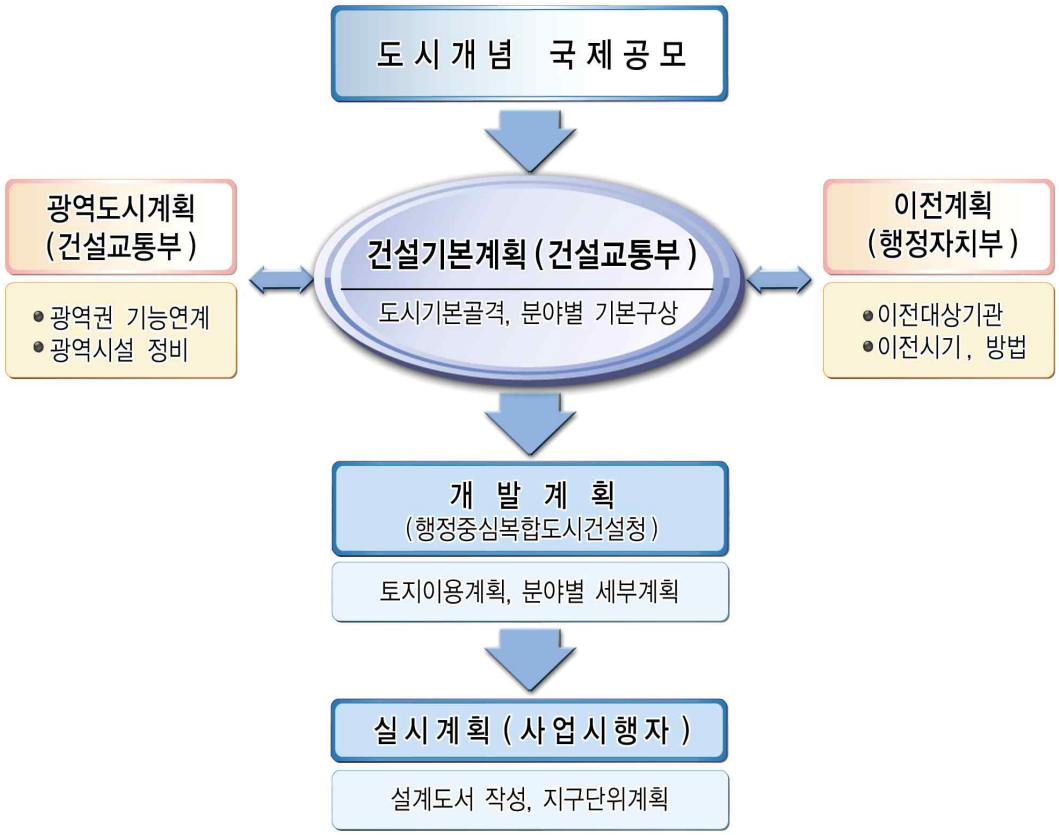
□ 계획간 연계 및 유기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국토연구원, 전략연구과제 연구기관, 개발계획 연구기관 등으로 공동연구단을 구성

○ 국토연구원이 기본구상 등 전체 연구의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부문별 전략연구과제의 연구내용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른 연구내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상호 정보공유로 계획간의 연계성을 강화

※ 12개 전략과제별 자문단 구성, 8개 분야 T/F 구성, 15차례 공개세미나 및 4회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도시건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주요계획의 추진체계 》



## 4. 도시건설 추진배경

### 1) 과거의 국가발전전략과 한계

□ 과거 개발연대에는 국가주도형 불균형 발전모델을 채택하여 압축성장을 추구

○ 특정산업 및 지역에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육성하여 1인당 국민소득 82불('60년)에서 16천불('05년)까지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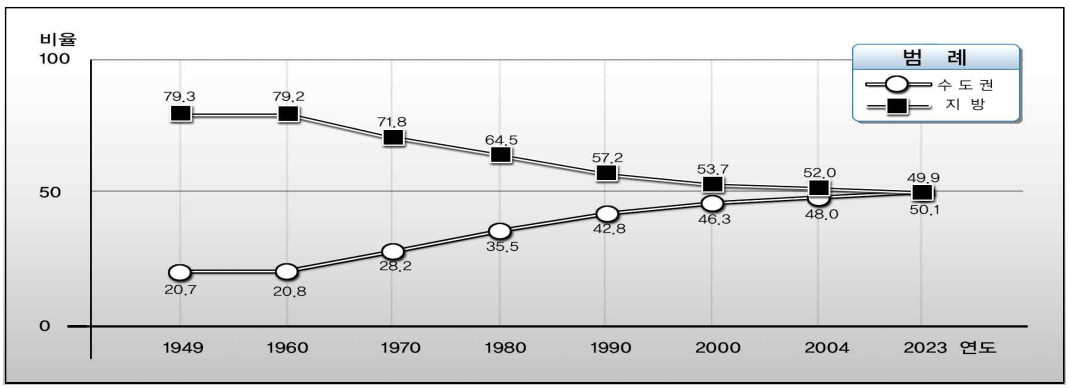
○ 단기간내 고도의 경제성장은 이루었으나 수도권의 과밀집중 및 지방과의 격차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

□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경제·환경적 비용의 급증과 지역간 격차심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는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나 비수도권의 비중은 '85년 58.0%에서 '02년 52.1%로 계속 하락

| 년 도 | 1985 | 1990 | 1995 | 2000 | 2001 | 2002 |
|---|---|---|---|---|---|---|
| 수 도 권(%) | 42.0 | 46.2 | 45.7 | 47.2 | 47.1 | 47.9 |
| 비수도권(%) | 58.0 | 53.8 | 54.3 | 52.8 | 52.9 | 52.1 |

○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04기준)가 거주하고 있으며 '23년에는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




□ 수도권 집중으로 교통혼잡, 환경오염, 주택보급률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

### 2)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의 개편

| |
|---|
|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br>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전략이 필요 |

□ 혁신주도형 발전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국토 개발·보전·관리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국민통합과 제2의 국가도약의 계기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분권 등 적극적인 지방화 전략으로 대내적 발전역량을 강화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기술혁신·혁신클러스터 육성 등 세계화 전략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분권 등을 통합패키지로 추진하여 정책의 효율성 제고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혁신주도형 발전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작용하여 국가재도약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전체의 발전을 도모

○ 수도권은 인구안정화와 함께 경제·금융·물류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

○ 지방은 지역별로 특색 있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 5. 도시건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1)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위한 준비작업('03.4~'04.4)

□ 수도권 과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

□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설정 및 입지 선정을 위한 현지조사 등 각종 준비작업을 수행

○ 준비작업을 전담할 조직으로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대통령 소속) 및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건교부 소속)을 설치('03.4.14)

○ 국토연구원 등 14개 전문연구기관으로 '신행정수도연구단'을 구성해 '도시기본구상'을 연구하고 '입지선정기준(안)' 등을 마련

- 각계 전문가의 폭 넓은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도시건설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별 37개 연구과제를 별도 선정하여 집중연구

○ 한국토지공사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입지가능 대상권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지자체의 검증을 실시

○ 공개세미나(3회) 및 전국 순회공청회(7개지역) 등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04.1.16)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

### 2)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추진('04.5~'04.10)

□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출범('04.5.21)하여 본격적으로 건설사업을 총괄·추진

□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국가기관 및 이전시기 등에 대한 '주요 국가기관(행정부) 이전계획'을 수립('04.8.10)

○ 행정부 소속의 73개 단위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2년부터 3개년에 걸쳐 이전하는 내용의 이전계획을 마련

○ 입법·사법부 등 헌법기관에 대하여는 각 기관이 이전여부를 자체 결정하고 국회에 동의안 제출을 요청할 때까지 계획 수립을 유보

□ 건설이념, 도시개발 방향,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안 등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제시하는 '건설기본계획'을 수립('04.8.10)

○ 신행정수도는 상생과 도약의 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

※ 도시성격 : 정치·행정도시, 친환경도시, 인간존중도시, 문화·정보도시

○ 도시규모는 인구 50만인, 개발면적 6,600~8,300만㎡로 쾌적한 중저밀도의 신도시로 '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

○ 건설비용은 총 45조 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정부는 광역교통시설, 공공시설 건설 등에 11조 3천억원을 투입

○ 공원·녹지는 기존 신도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고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 도시로 조성

○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보행자와 대중교통 위주로 도시교통체계를 구축

□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후보지역을 평가하고 국민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연기·공주지역을 입지로 확정('04.8.11)

○ 현지조사 및 균형발전성·개발가능성·보전필요성 분석을 종합하여 국토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에서 4개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 후보지 : ①진천·음성, ②천안, ③연기·공주, ④공주·논산지역

○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선정을 위해 각 시·도 및 관련학회가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후보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국가균형발전효과, 국내외 접근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연조건,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 등의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전국공청회(13개지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기·공주지역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

□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04.10.21)으로 특별법의 효력이 정지되고 신행정수도 건설사업도 중단

○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과정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제기('04.7.12)

※ 청구인들은 국민투표권·재산권·청문권·공무담임권·평등원칙·직업선택 및 거주이전의 자유·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주장

○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인 점은 관습헌법에 해당하여 수도 이전은 헌법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논지로 특별법을 위헌결정

- 위헌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추진이 중단되고 특별법 및 이전계획, 건설기본계획 등도 효력을 상실

###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마련('04.11～'05.3)

□ 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한 균형발전사업의 차질 및 지역주민들의 손실우려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마련

□ 후속대책의 신속한 마련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를 설치('04.11.18)

○ 본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속대안 마련 기본원칙'과 '후속대안선정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발표

○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후속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3단계에 걸친 단계적 대안 수립절차를 마련

※ ①여론수렴 및 공론화 과정 → ②대안압축과정 → ③대안결정과정

□ 다양한 국민여론의 수렴과 민간 전문가그룹의 적극적 대안 제시 기회를 마련하여 국민의 참여와 선택으로 후속대책을 수립토록 추진

○ 정치권, 학술단체, NGO, 사회원로,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과 총 65회의 토론회·간담회를 실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대안을 검토

○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된 11개 대안을 대안선정원칙에 따라 검토·평가하여 3개 유력대안으로 압축하고 국회특위에 제출

※ 3개 대안 : ①행정특별시안, ②행정중심도시안, ③교육과학도시안

□ 국회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04.12.23)하고 후속대안 확정 및 특별법 입법을 추진

○ 각 7차에 걸친 본위원회와 소위원회 활동 및 국회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이전기관·예산지출상한 등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결정

□ 국회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공포('05.3.18)

###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05.4~ )

□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05.4.7) 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추진단을 설치

□ 충남 연기·공주 및 충북 청원지역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를 지정('05.5.24)

□ 본격적인 도시건설계획 수립을 위해 건설기본계획('05.5.26), 개발계획('05.8.22), 실시계획('05.9.30) 수립 연구 등에 차례로 착수

○ 각종 계획 수립간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기관을 총괄하여 '공동연구단'을 구성('05.9.30)

□ 12부 4처 2청 등 총 49개 단위기관을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확정·고시('05.10.5)

□ 도시개념 국제공모를 실시('05.5.27)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05.11.11~14) 당선작 5개 작품을 발표('05.11.15)

□ 예정지역 토지·건물 등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05.6~8)를 실시하고 11월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한 후 보상에 착수('05.12.20)

□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개청('06.1.1)

### 5) 도시개념 국제공모의 시행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21세기의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공모를 시행

○ 국제공모를 통해 도시이미지, 도시공간구조 등 도시개념에 대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

□ 건설기본계획 수립 등 전체일정을 감안하여 예정지역 지정에 이어 공모를 공고('05.5.27)하고, 11월까지 당선작을 결정토록 추진

○ 추진위원회에 국제현상공모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전문위원(PA : Professional Adviser)을 선임하여 공모시행을 주관·감독

□ 세계 26개국에서 제출된 121개 작품(국내 57개, 국외 64개)에 대해 국내외 저명한 도시계획가와 건축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5개 작품(국내 2개, 국외 3개)을 당선작으로, 5개 작품(국내 1개, 국외 4개)을 장려상으로 선정('05.11.15)

《 심사위원장(David Harvey)의 심사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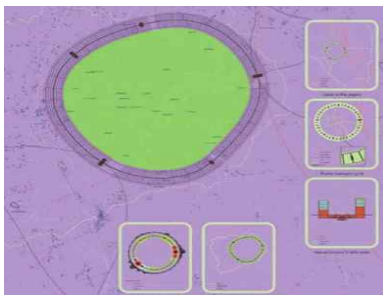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단순한 신도시를 뛰어넘어 한국의 발전전략에 부합하고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도시건설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당선작을 선정

○ 중앙행정기능의 이전뿐만 아니라 여타 기능의 수용을 위한 개방성을 강조하고 도시의 정체성·이미지의 규정을 중시

○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통합하고 이를 개발유도수단으로 제안하였으며, 교통·경관·에너지·친수공간 등 환경적 이슈를 적극 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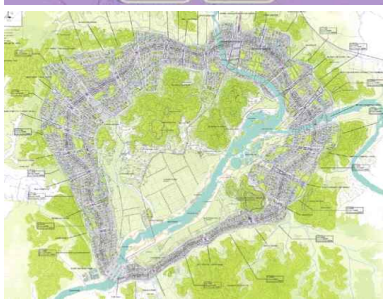
○ 도시민의 일상적인 생활의 질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였으며 민주사회에서의 시민의식에 대한 문제를 고려

《 도시개념 국제공모 당선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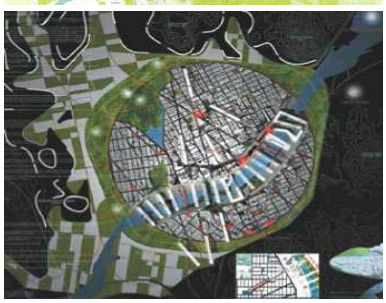
**뒤리그(스위스) : 'The Orbital Road'**

· 장남평야 · 대평뜰을 그대로 존치한 환상형(Ring) 도시구조
· 대중교통지향적이고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
· 도시기능을 5개의 거점으로 분산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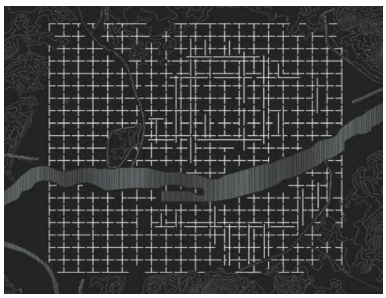
**페레아(스페인) : 'The City of Thousand Cities'**

· 예정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환상형 도시구조
· 다각적인 기술적 검토에 기반하여 개발과 보존이라는 명제를 명쾌하게 해석
· 사회적 특권과 차별이 없는 민주적 도시구조
· 도시의 기능이 분산된 위계없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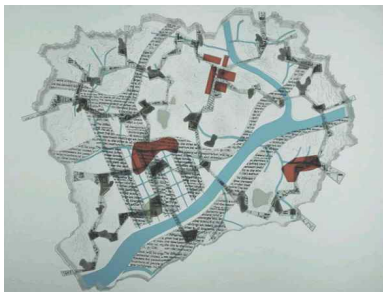
**송복섭(한국) : 'Thirty Bridges City'**

· 고밀도의 도시를 지향하여 원형의 중심부를 집중개발하고 그 외곽은 자연 상태를 유지
· 30개의 다리위에 정부청사 및 공공시설 등을 배치



**아우렐리(이태리) : 'A Grammar for the City'**

· 도시를 구성하는 방식과 절차를 제시
· 기존 신도시의 도로에 의한 도시구조 결정 방식을 탈피하여 구체적 용도를 정하지 않은 기하학적 벽체에 의해 도시골격을 형성



**김영준(한국) : 'Dichotomous City'**

· 도시건설 과정에 대한 논의에 초점
· 실질적인 도시 마스터플랜보다는 정보들을 나열하고 도시와 자연의 조화 등 이질적인 현상들을 중첩
· 도시개념을 구체적으로 조직해내는 원칙으로 활용가능

**※ 장려상 5개 작품**

· 위르겐 쿤츠만(독일) 'City in Flow', 토마스 푸셔(오스트리아) 'Yeon Meong', 최현규(한국) '비보(裨補)', 스미야 마모루(일본) 'Archipelagic City', 크리스티안 운두라가(칠레) 'Nurturing a New Urbanity'

### 6) 건설기본계획 수립 과정

□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샵, T/F회의 등을 개최('05.7~'06.3)

○ 기본구상 및 12개 전략연구과제는 분야별 수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 건설기본계획 전략연구과제 및 장사시설, 생활권 및 기본구상 등 15개 주제를 선정하여 공개세미나를 개최('06.1~3)

○ 분야별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일반인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 및 아이디어를 수렴

□ 건설교통부, 건설청, 공동연구단 등이 공동으로 전담 T/F를 구성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안)을 작성('06.2~4)

○ 도시 기본구상을 토대로 12개 전략연구과제 연구결과 및 자문, 공개세미나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마련

□ 건설기본계획(안)에 대해 4회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06.5)

○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사전조정 과정('06.5~6)과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위원회 심의('06.7)

□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06.7)

## 7) 향후 추진계획

□ 건설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07년 공사에 착공하고 ’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하여 ’30년까지 도시건설을 완료

| 추진단계 | 주요 사업일정 |
|---|---|
| 계획단계<br>(~’07 상반기) | · 건설기본계획 수립(’05.5~’06.7)<br>· 광역도시계획 수립(’05.7~’07 상반기)<br>· 개발계획 수립(’05.8~’06.11)<br>· 실시계획 수립(’05.9~ ) |
| 건설단계<br>(~’11 말) | · 공사 착공(’07.7)<br>· 청사 건축 착수(’08 하반기)<br>·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 이전단계<br>(’12 이후) | ·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12 ~ ’14) |

□ 사업 추진일정표

| | ’05 | | | | ’06 | | | | ’07 | | | | ’08 |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 건설기본계획 | | 착수 | | | | | 완료 | | | | | | | | | |
| 광역도시계획 | | | 착수 | | | | | | | 완료 | | | | | | |
| 개발계획 | | | 착수 | | | | | 완료 | | | | | | | | |
| 실시계획 | | | 착수 | | | | | | | 1차 완료 | | | | | | 계속 |
| 공사착공 | | | | | | | | | | | 착공 | | | | | 계속 |

# Ⅱ. 도시건설 여건 분석

1. 주요 관련계획
2. 지역 여건
3. 종합 분석

## 1. 주요 관련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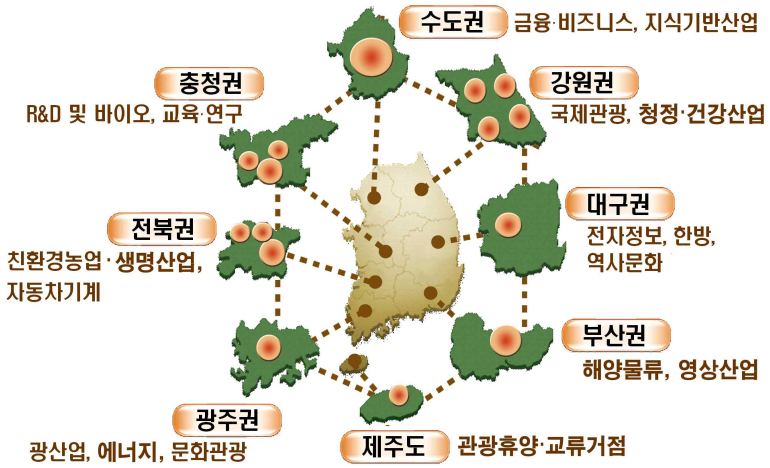
###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06~'20)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을 '7+1'의 경제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특성에 따른 자립적 발전을 추진

| 수도권 중심의 1극구조 | ⇨ |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발전하는 '다핵연계형 구조' |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기업도시의 건설, 수도권 종합발전대책 등 국가재편 프로젝트의 통합적 추진

《 다핵연계형 국토 구조 》




○ 충청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권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부여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인접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광역교통망 등 연계 인프라를 대폭 확충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국가중추관리기능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주변도시의 배후지원기능을 확대

## 2) 주요 관련계획 현황

### □ 대전권광역도시계획('20)

○ 첨단과학기술의 지식·정보거점도시권의 구현으로 자립경제기반을 구축하며, 도시·지역별 적정기능 배분과 충청권의 균형발전을 도모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입지한 북부·서부생활권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기능 및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

- 대전시 : 대전광역권의 중심, 국가행정·과학기술·업무·금융의 중추기능 강화
- 청주시 : 국제교류, 행정·교육·정보·물류 등의 중심지로서 첨단지식기반산업 육성
- 청원군 : 전기전자·보건의료 관련 첨단산업 육성, 물류기지 구축
- 연기군 :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물류기지의 전국거점화
- 공주시 : 서부생활권의 중심으로서 문화·관광·교육의 거점

### □ 대전도시기본계획('20)

○ 삶의 질을 제고하는 '자연·과학·문화의 도시'로 육성하고 균형적 도시구조의 형성 및 선진도시기반 조성을 추진

○ 도시공간구조를 다핵화하고 중심지역을 특성화하며 대전광역도시권의 축선별 중심거점 기반을 조성

### □ 청주도시기본계획('21)

○ 중부권과 청주권의 모도시, 중부권과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며 대외적 경쟁력을 제고

○ 오송신도시, 오창과학산업단지, 보건의료과학단지, 에어로폴리스 등의 대단위 개발산업과 함께 첨단기술산업 부문의 성장을 촉진

《 계획간 관계 》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국토종합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은 제외)에 우선(특별법 제7조)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여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특별법 제17조)

## 2. 지역 여건

### 1) 입지의 선정

□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시 충분한 사전조사와 연구를 거치고 폭넓은 국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입지를 선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지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마련과정에서 연기·공주지역의 입지적 우위를 활용토록 특별법 제11조에 규정

□ 도시의 성장단계에 따른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대상지역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

○ 예정지역은 직접적인 도시개발 대상지역으로, 계획적 개발로 효율적인 도시기능을 유치하여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

- 건설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주거, 공원·녹지, 교육·문화시설 등 도시기능이 입지

○ 주변지역은 도시개발에 따른 영향을 받는 지역 중 주변 대도시와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적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역

-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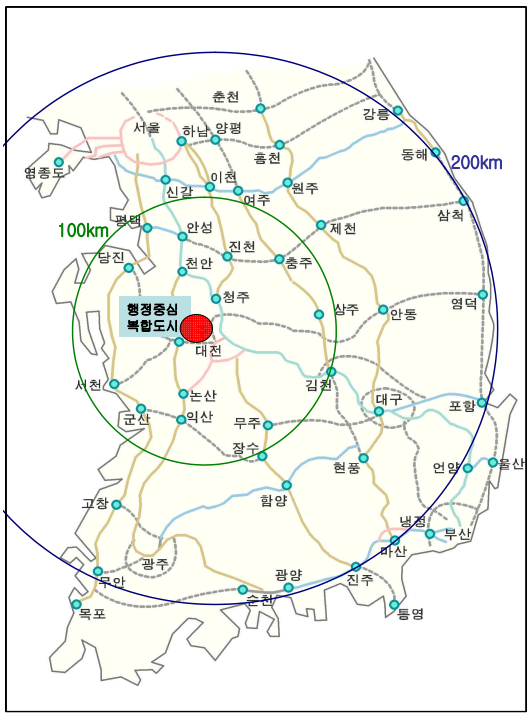
## 2) 지리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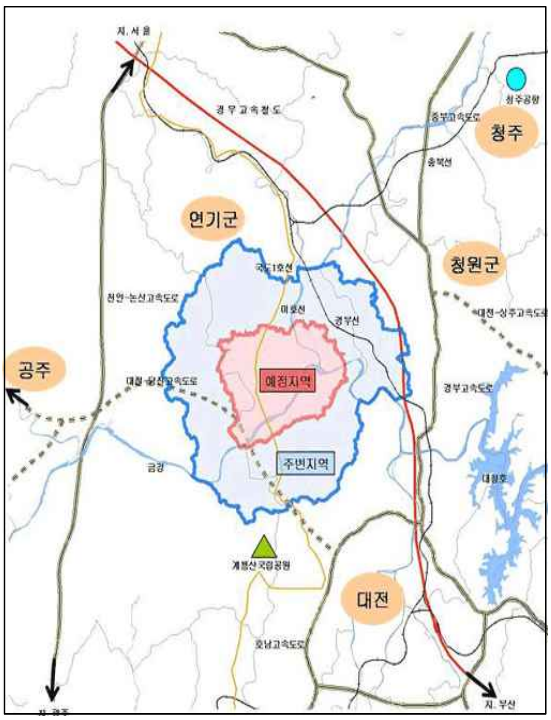
□ 예정지역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연기군과 공주시에 위치하며 동경 127도와 북위 36도 부근으로 서울에서 150km정도 이격

○ 예정지역의 면적은 73.14㎢이며,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68.24㎢와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4.90㎢로 구성

□ 예정지역의 동측으로는 청원군과 청주시, 남측으로는 대전시, 서측으로는 공주시와 논산시, 북측으로는 연기군이 인접

《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리적 위치 》



## 3) 자연적·물리적 여건

### □ 자연환경

○ 대체로 완만한 북고남저형의 구릉지로서 북측은 금북정맥의 지류인 국사봉(214m)과 접하고 남측은 금강유역의 평야지대에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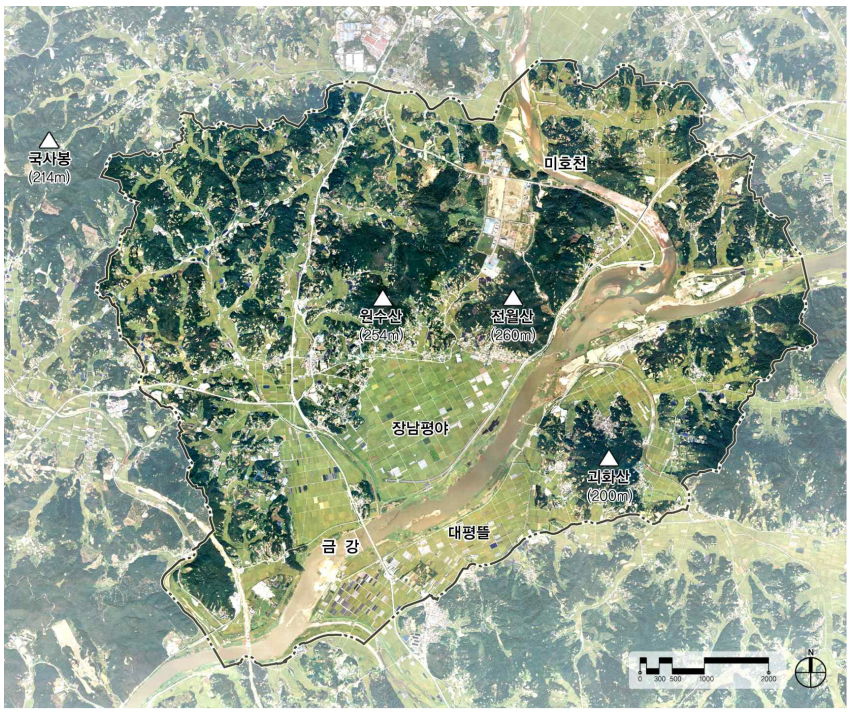
- 예정지역 중심에 원수산(254m)과 전월산(260m)이 위치하고 금강 남측으로 괴화산(200m)이 위치

- 금강과 미호천이 합류하여 예정지역내를 관통하고 금강 양쪽으로 장남평야와 대평뜰이 평야지대를 형성

○ 봄·여름은 남서풍이, 가을·겨울에는 북서풍이 주된 풍향이며 평균기온은 13.1℃('00~'05년 기준)

- 습도는 65.9%, 연간강수량은 1,469mm('00~'05년 기준)

《 예정지역 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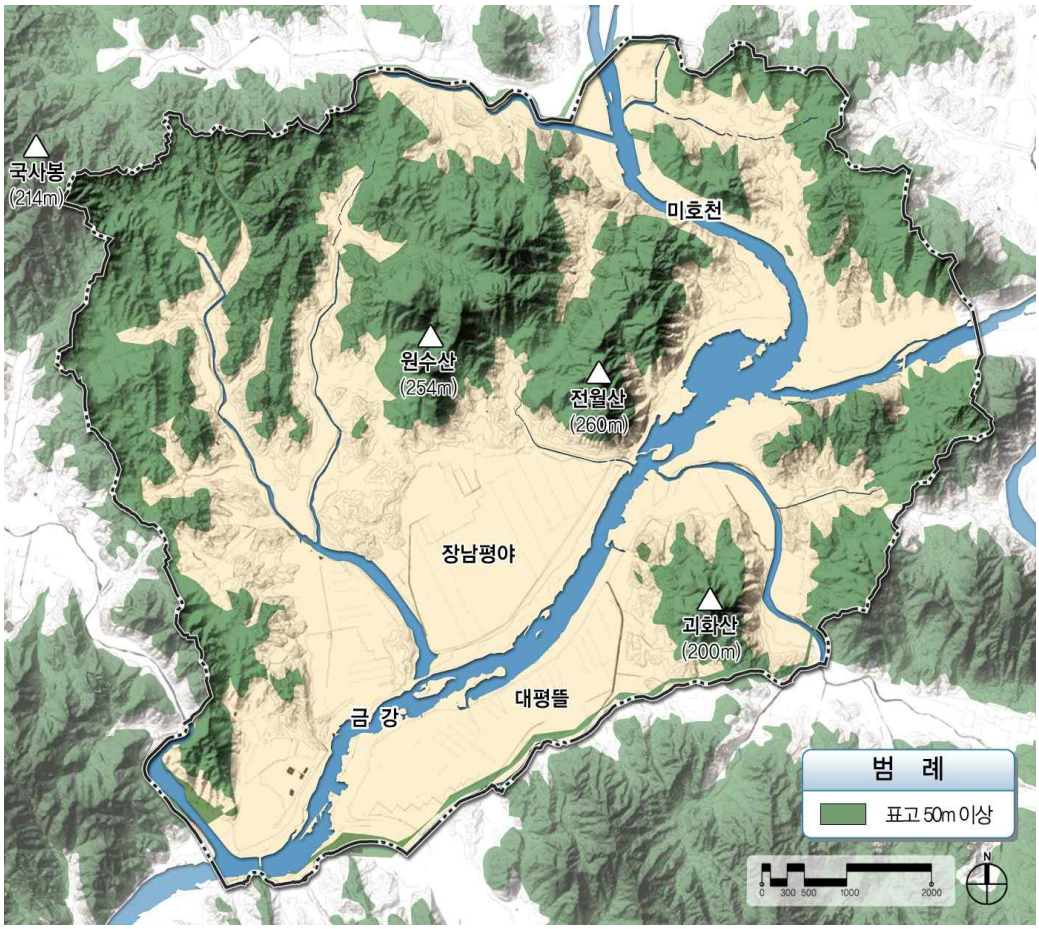


○ 예정지역은 대부분이 매우 낮은 구릉지로서 표고 50m이하 면적이 60.5%, 50~100m 면적이 30.3% 임

《 예정지역 표고 분석 》

| 구 분 | 계 | 50m이하 | 50~100m | 100~150m | 150~200m | 200m이상 |
|---|---|---|---|---|---|---|
| 면적(천m²) | 73,140 | 44,250 | 22,161 | 5,339 | 1,243 | 147 |
| 구성비(%) | 100.0 | 60.5 | 30.3 | 7.3 | 1.7 | 0.2 |

《 예정지역 표고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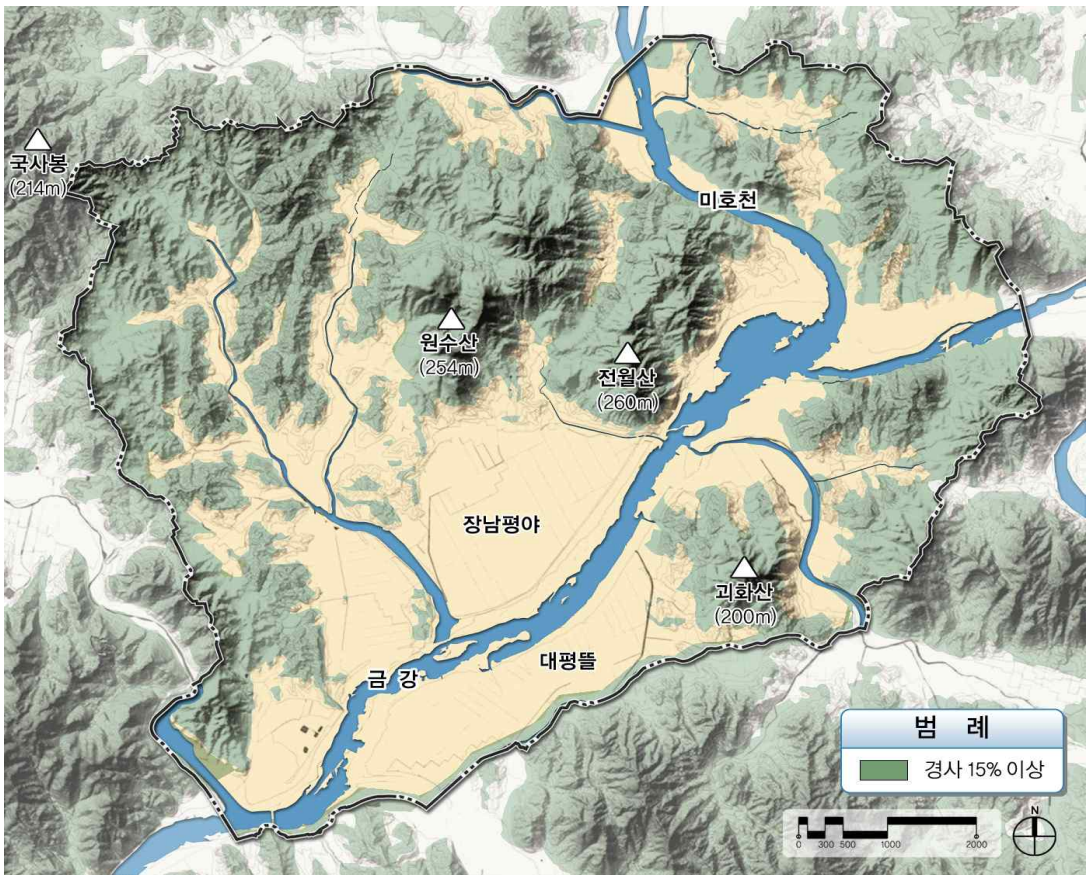


○ 경사도 5%이하의 평탄지가 55.3%이고 5~10%가 3.4%, 10~15%가 4.3%로서 경사도 15%이하 지역이 전체의 63.0%를 차지함으로 지형적 개발여건이 양호

《 예정지역 경사도 분석 》

| 구 분 | 계 | 5%이하 | 5~10% | 10~15% | 15~20% | 20%이상 |
|---|---|---|---|---|---|---|
| 면적(천m²) | 73,140 | 40,446 | 2,487 | 3,145 | 3,364 | 23,698 |
| 구성비(%) | 100.0 | 55.3 | 3.4 | 4.3 | 4.6 | 32.4 |

《 예정지역 경사도 현황 》



## □ 생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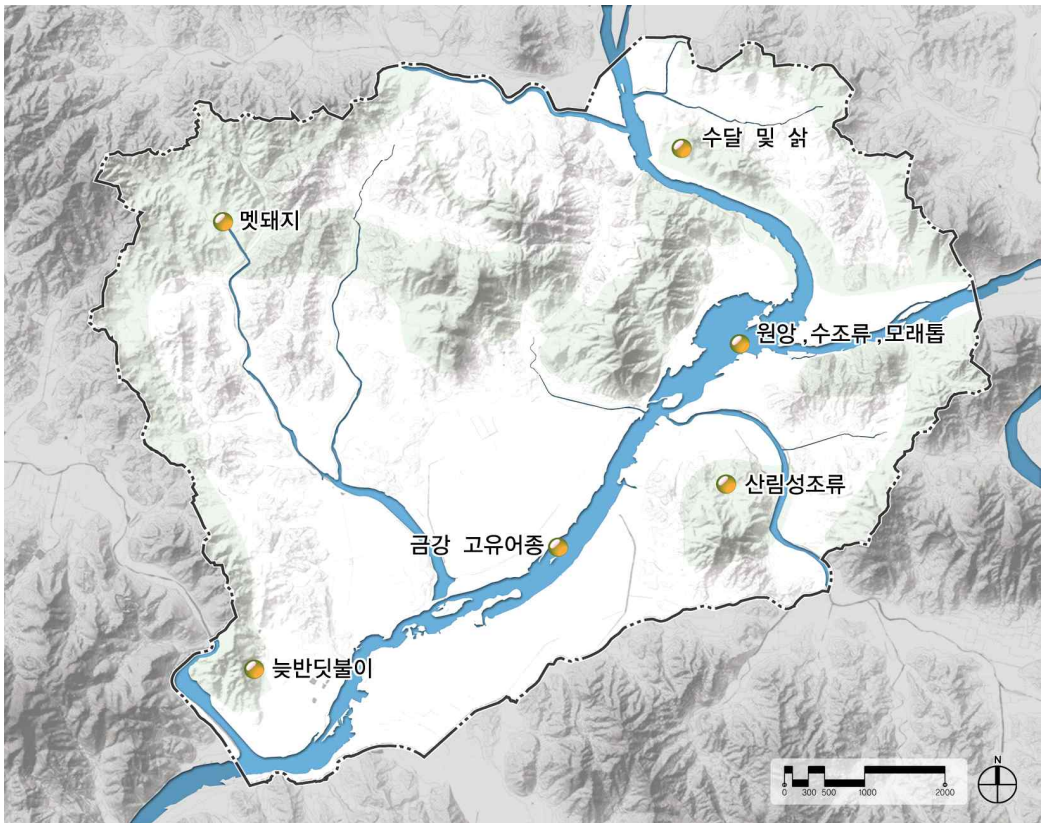
○ 주요 산림생태계는 동서방향의 국사봉~원수산~전월산을 잇는 녹지흐름이 주요하게 형성되어 생태연결체계 형성여건이 양호

○ 국가하천인 금강, 미호천과 지방하천인 제천, 방죽천, 삼성천 등으로 양호한 하천생태공간을 형성

○ 산림과 하천이 연결되는 주요 지점으로 금강·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 일원과 괴화산 인근 등은 생태네트워크가 양호하게 연결

○ 국사봉 인근에 멧돼지, 금강 하류에 늦반딧불이 서식이 추정되며 미호천 및 금강 합수부 인근에는 모래톱이 발달하고 수조류·수달·삵 등의 서식이 추정되는 등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

《 생태환경 분석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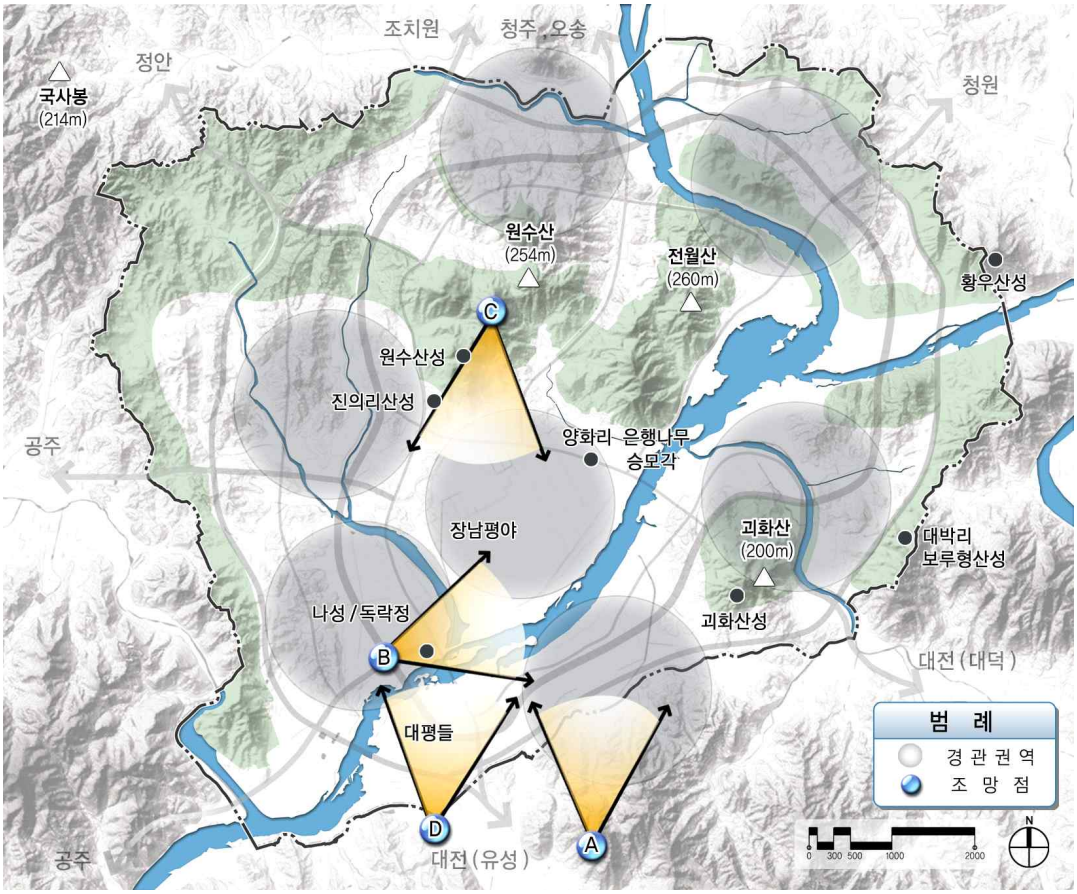


## □ 경관자원

○ 주요 경관자원으로 원수산, 전월산, 괴화산, 장남평야, 대평뜰 등이 입지하여 자연경관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보유

○ 구릉지 등 자연경관과 도시진입부 등 주요한 지형지세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독특한 특성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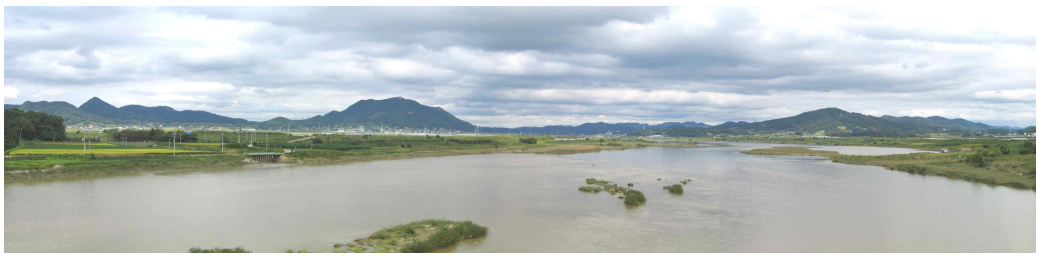
《 경관자원 분석도 》




※ 경관권역은 중심부 오픈스페이스와 도시주요기능이 배치되는 거점을 기준으로 7개 권역으로 구분

《 주요 조망도 》

A. 비학산에서 본 원수산, 전월산



B. 금남교에서 본 금강(동측)

C. 원수산에서 본 비학산

D. 대평뜰 상부에서 본 장남평야

## 4) 인문·사회적 여건

### □ 인구변화 및 구조

○ 충청권의 인구는 약 480만인으로 지난 6년간('00~'05) 2.4%가 증가하여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2.0% 내외)을 상회

- 충청권으로의 인구유입은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으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최근 5년간 충청권 인구변화 》

| 구 분 | 인구(만인) | | 인구 증감(만인) |
|---|---|---|---|
| | '00년 | '05년 | |
| 대전광역시 | 136.8 | 144.2 | 7.4 |
| 충청북도 | 146.7 | 145.9 | △0.8 |
| 충청남도 | 184.5 | 189.0 | 4.5 |
| 충청권 | 468.0 | 479.1 | 11.1 |

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센서스 ('05년은 잠정)

-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총 18천세대, 47천인으로 추정

《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인구현황 》

('05.3 기준)

| 구 분 | 예정지역 | 주변지역 | 합 계 |
|---|---|---|---|
| 세대수(천가구) | 4 | 14 | 18 |
| 인구수(천인) | 10 | 37 | 47 |

○ 충청권의 연령별 인구구조는 20세미만의 비교적 젊은 계층의 인구비율이 31.0%로서 전국평균(29.0%)을 상회

## □ 산업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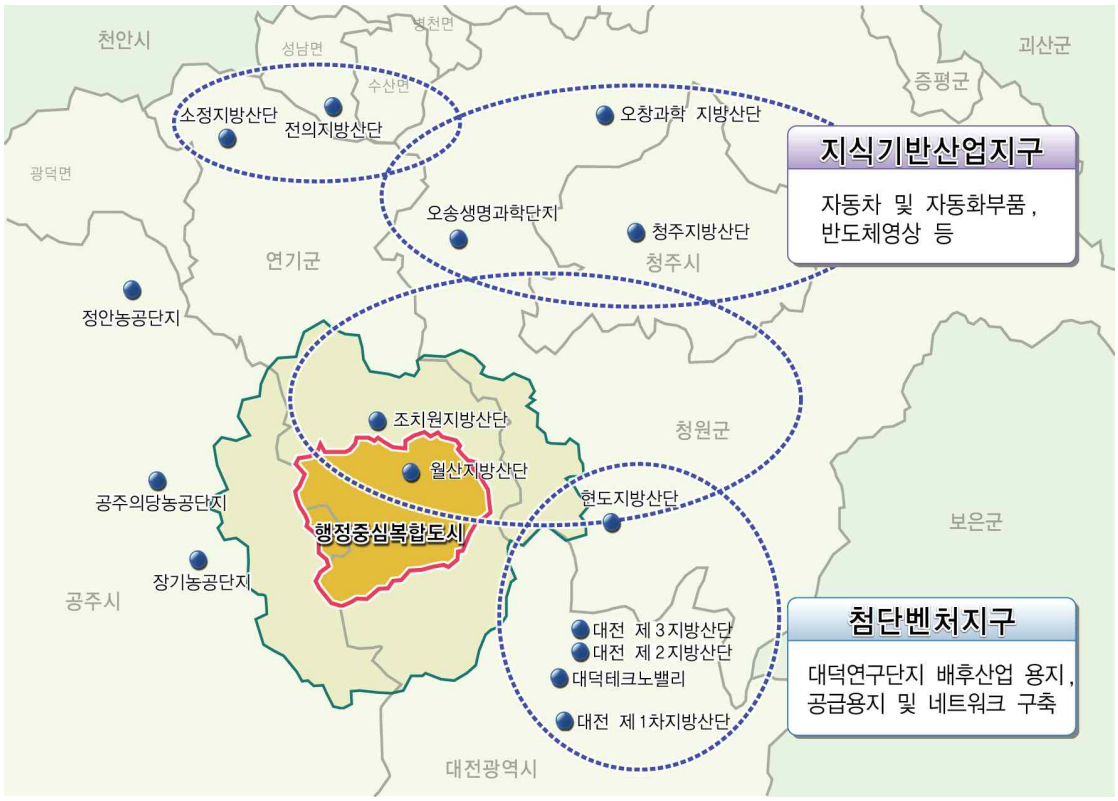
○ 충청남도 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는 '89년 농림어업 31.6%, 광공업 18.3%에서 '01년 농림어업 12.1%, 광공업 39.6% 등으로 변화

- 지역내총생산(GRDP)은 '89년 전국대비 대전 2.3%, 충남 3.7%였으나, '01년 현재 대전 2.4%, 충남 4.8%로 증가

○ 충청권은 각 권역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산업이 특성화되어 개발을 추진 중이므로 광역산업클러스터 형성 잠재력이 높음

※ 대전 : 전자, 통신, 생물, 정밀화학, 정보
충북 : 전자장비, 반도체, 정밀화학, 의학생물
충남 : 전자디스플레이, 정밀기기, 석유화학, 자동차

《 인접지역 산업현황 및 계획 》



## □ 교통여건

○ 전국 주요 도시로부터 200㎞ 내에 입지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고속국도 등 광역교통망체계가 양호

- 예정지역 주변을 통과하는 고속국도는 총 4개 노선으로, 이중 당진～대전고속국도는 '09년에 개통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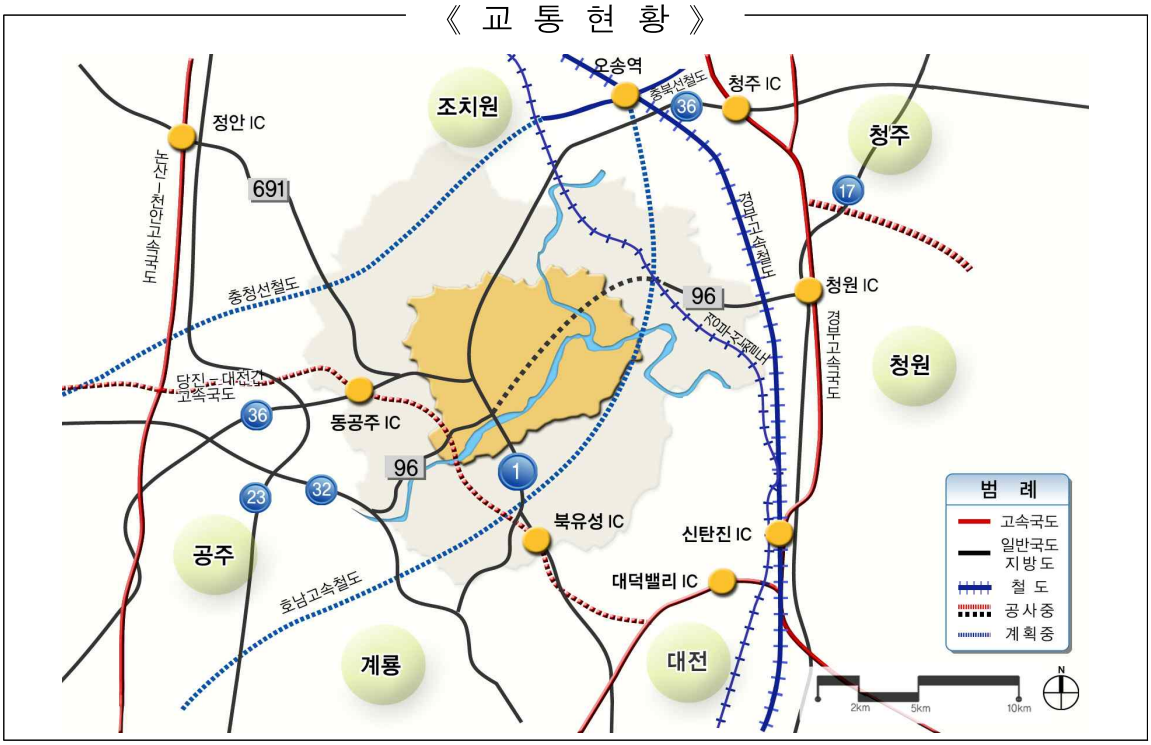
※ 인접 고속국도와의 거리
경부고속국도(청원I.C) : 7.5km　　호남고속국도(대덕밸리I.C) : 9.0km
논산-천안고속국도(정안I.C) : 13.5km　당진-대전고속국도(북유성I.C) : 4.5km

- 일반국도 1호선, 국도 36호선 및 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 등이 예정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며 지역내 주요 진입로로 활용

○ 예정지역 동측 외곽으로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철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가 동남측으로 근접, 건설될 것으로 전망

- 북동쪽에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이 인접하고 있으며 인근에 청주국제공항이 위치

《 교 통 현 황 》



## 3. 종합 분석

### □ 성장잠재력 분석

| | | |
|---|---|---|
| 우수한 자연여건과 함께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높은 발전가능성 보유 | ⇔ | 생태환경의 고려와 함께 장기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광역적 · 지역적 도시문제 해결 필요 |

《 SWOT 분석 》

| 강점 (Strength) | 약점 (Weakness) |
|---|---|
| · 우수한 자연경관과 수변공간<br>· 양호한 광역교통망 및 접근성<br>· 개발에 적정한 지형 및 표고 | · 장마철 등 불규칙한 금강의 수량<br>· 생태자원, 문화재 등 고려 필요<br>· 국도1호선이 예정지역을 통과 |

| 기회 (Opportunity) | 위협 (Threat) |
|---|---|
| · 주요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의 이전<br>· 인근의 첨단산업 및 연구기능 연계<br>· 금강 등 친수공간 조성 유리 | · 간선교통망의 혼잡 우려<br>· 주변 도시간 기능과 역할분담 필요<br>· 개발장기화로 자족기능의 조기확보 필요 |

### □ 약점 및 위협요소에 대한 대응방향

○ 안정적인 하천유량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하천은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공유공간으로 활용

○ 생태환경 및 문화재조사를 통해 보전지역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친환경 · 생태도시 및 문화도시로 건설

○ 도시내 교통망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간 공간구조 및 기능을 연계

○ 도시개발 초기부터 다양하고 복합적인 도시기능을 유치하고 도시생활에 필요한 자족기능의 조기 유치방안을 마련

# Ⅲ.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1. 도시건설의 정책목표
2. 도시건설의 이념
3.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 1. 도시건설의 정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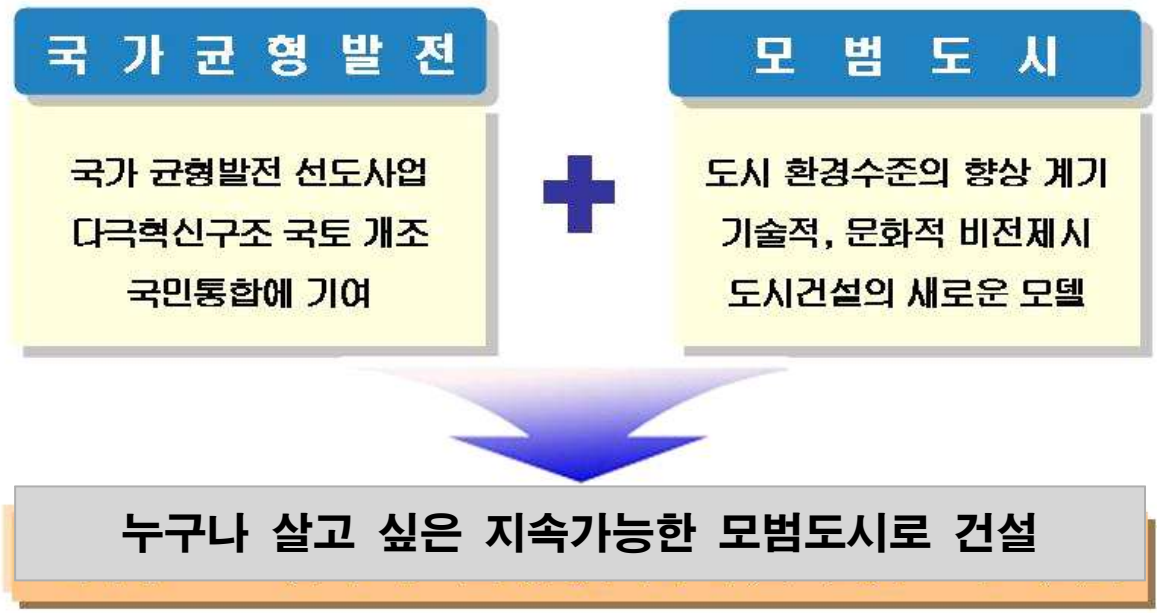
| |
|---|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수준을 향상시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로 조성** |

###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 국가균형발전 주요 정책의 선도사업
- 다극 분산형 국토구조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지역간 상생발전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

### 세계적인 모범도시

- 우리나라 도시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
- 기술적, 문화적 성과를 담아내는 비전 제시
- 향후 건설되는 도시들의 새로운 모델 제시



## 2. 도시건설의 이념

| |
|---|
| 국가균형발전 · 경쟁력 강화의 선도 ⇨ **'상생(相生)과 도약(跳躍)'** |

○ 상생 : 지역간 · 세대간 · 계층간 융합을 이루는 **'조화로운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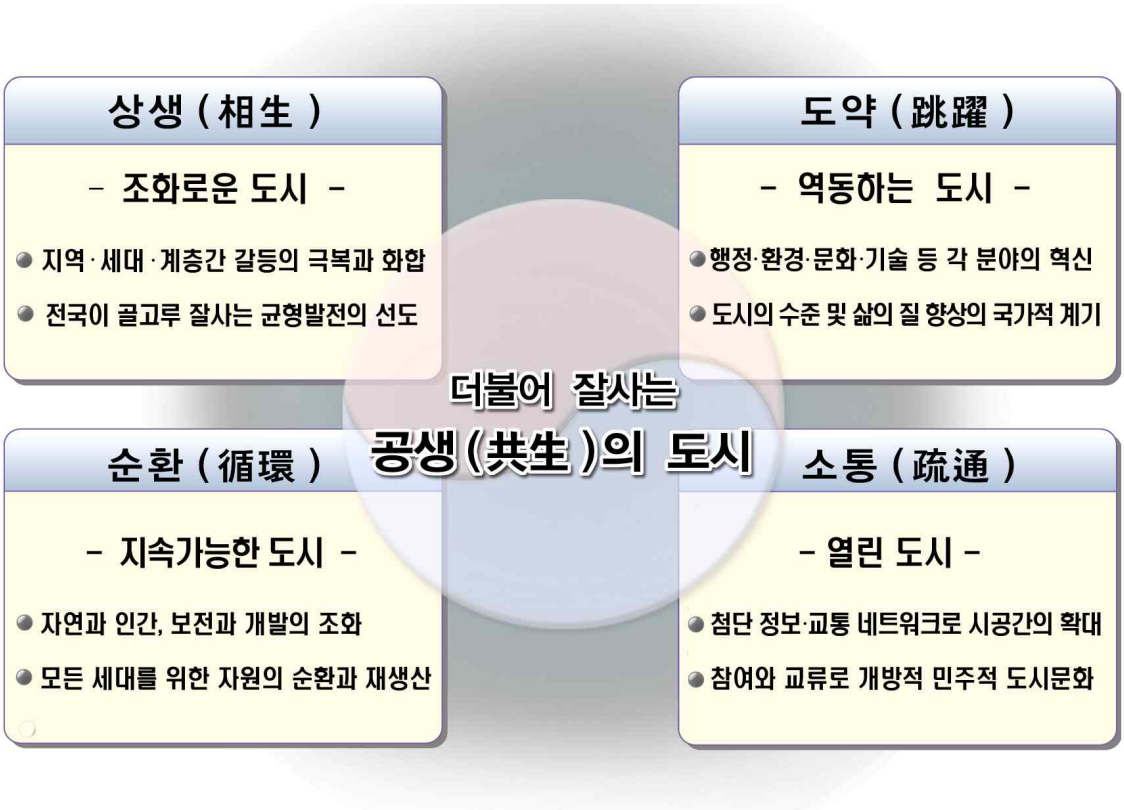
○ 도약 : 국가적 혁신과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역동하는 도시'**

| |
|---|
| 세계적인 모범도시의 추구 ⇨ **'순환(循環)과 소통(疏通)'** |

○ 순환 : 생태 · 경제 · 사회간 연계와 재생산이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 소통 : 첨단기술 및 공동체 의식을 통해 교류와 참여가 있는 **'열린 도시'**

| |
|---|
| **'상생과 도약', '순환과 소통'의 도시 건설이념 아래 더불어 잘사는 '공생(共生)의 도시'를 추구** |



## 3.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 □ 복합형 행정 · 자족도시

○ 중앙행정기능을 이전 · 수용하는 복합형 자족도시로 개발하여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

○ 중추행정기능을 도시의 주기능으로 하며 문화 · 국제교류, 연구개발 · 교육, 첨단산업 및 의료 · 복지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유치

○ 전국 주요 도시 어디서나 2시간 내외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고르게 향유

## □ 쾌적한 친환경도시

○ 정온한 중·저밀도의 미래지향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요 녹지축과 하천을 연결하여 인간과 생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 구축

○ 수질보호를 위해 환경친화적 하천관리를 실시하고 시민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조성

○ 대중교통위주의 교통체계구축, 중수 및 우수 활용,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건설

## □ 살기 좋은 인간중심도시

○ 인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계층이 도시의 어느 곳이나 쉽게 갈 수 있도록 장벽 없는 도시 구현

○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는 생활하기 편한 도시 구현

○ 방호·방재 측면에서 종합적인 예방 및 관리체계를 완비하여 시민과 국가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는 도시 조성

## □ 품격 높은 문화 · 정보도시

○ 지역문화와 세계문화를 함께 수용하고 과거·현재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여 문화 정체성 확립

○ 일상생활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공간과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개성있는 도시문화 조성

○ 시민이 참여하는 전자행정과 지식사회를 선도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정보문화비지니스 창출을 선도하는 유비쿼터스도시 구현

# Ⅳ. 도시 공간구조

1. 도시기능 설정 및 인구구상
2. 활력있는 도시구조
3. 생활권 계획
4. 토지이용의 기본방향
5. 도시건설지표

# 1. 도시기능 설정 및 인구구상

◇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심적 기능**
◇ 충청권 지역경제에 대한 **혁신지원 기능**
◇ 시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도시서비스 기능**

## 1) 도시기능의 설정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되는 선도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중추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기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도시기능의 설정이 중요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과 일치되도록 도입 가능한 도시기능을 설정하고 기능도입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

□ 도입기능을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적 기능, 지역경제 혁신지원 기능, 시민의 일상생활지원 도시서비스 기능 등으로 구분

### 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심적 기능

-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2부 4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 등 중추행정기능과 국책연구기관을 이전

- 국가행정의 중심적 도시로서 대외적 교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회의장, 호텔, 컨벤션센터 등 국제교류기능을 유치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문화의 거리 등 수준 높은 문화도시에 적합한 중심적 기능을 도입

### ② 지역경제 혁신지원 기능

- 예정지역내 월산산업단지를 활용하여 도시형 첨단지식기반 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자족성 제고

-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인근 충청권 산업과 연계·보완 관계 형성

- 대학교, 전문대학원, 연구소 등 교육기능과 연구개발기능을 유치하여 산·학·연 혁신클러스터를 형성

### ③ 일상생활지원 도시서비스 기능

- 목표인구 50만인의 도시민이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서비스 기능 확보

- 시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청, 시의회,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도시행정기능을 도입

- 상업, 금융, 유통, 업무 등의 다양하고 편리한 상업업무 기능을 도입

《주요 도입기능》

| 구 분 | 도입 기능 | 도입 목적 | 세부 내용 |
|---|---|---|---|
| 균형발전기능 | 중앙행정 | 수도권 기능 이전 |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 |
| | 국제교류 | 국제 교류 | 국제회의장, 호텔, 전시장 등 |
| | 종합문화 | 문화활동의 중심지 | 박물관, 미술관, 종합공연장 |
| 지역혁신기능 | 지식기반산업 | 자족적인 도시발전 충청권 혁신체계 | 출판, 의료, 통신 등 |
| | 교육연구 | | 대학교, 기업 및 대학연구소 |
| 도시서비스기능 | 상업업무 | 편리한 도시생활을 위한 기초기능 | 은행, 쇼핑센터 등 |
| | 도시행정 | | 시청, 시의회, 경찰서, 소방서 등 |

## 2) 인구구상

《 인구구상 기본방향 》

- 이전 및 기능도입에 따른 인구유입을 최대한 수용하고 도시의 생활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인구규모를 설정
- 도시기능의 도입에 따라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인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목표인구를 설정
- 일상적 도시생활에 필요한 교육, 구매, 의료, 위락기능 측면에서 주요 시설들이 유치될 수 있는 인구규모를 설정

□ 균형발전·지역혁신·도시서비스 등 도시기능 도입에 따른 고용 창출은 약 25만인이며 유발인구를 포함하면 총 인구는 50만인 수준

○ 일반적으로 복합쇼핑센터, 종합병원, 대학교 등 구매, 의료, 교육 등에서 최상위 기능을 유치할 수 있는 인구규모로 50만인이 바람직

○ 주요 도시기능 도입에 따른 인구를 수용하고 도시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능을 유치할 수 있도록 50만인으로 설정

《고용인구의 추정》

| 도입 기능 | | 인원(천인) | 구성비(%) | 비고 |
|---|---|---|---|---|
| 2차산업 | | 30 | 12.0 | · 첨단지식기반산업기능 등 |
| 3차 산업 | 민간 서비스 | 160 | 64.0 | · 첨단지식기반서비스기능<br>· 일반상업업무서비스기능 |
| | 공공 서비스 | 60 | 24.0 | · 공공행정(중앙행정기능 및 도시행정기능)<br>· 교육(대학교 포함) 및 연구기능 |
| 총 고용인구 | | 250 | 100.0 | - |

※ 1차 산업은 1%로 추정되어 주요 도입기능에서 제외

□ 첫마을사업,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식기반산업, 대학 등 단계별 도시기능의 도입에 따라 인구배분 시나리오를 작성

○ 도시성장단계를 초기활력단계, 자족적 성숙단계, 완성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30년까지 목표인구 50만인을 단계적으로 배분

○ 초기단계에는 정책추진력에 의한 정책적 유입인구가 중심이며 후속단계로 갈수록 도시의 자족적 경쟁력에 의한 인구가 유입

- 초기활력단계 : 행정·공공기관 종사자 등 정책적 인구유입
- 자족적 성숙단계 : 도시의 자족적 성장동력에 의한 인구유입
- 완성단계 : 국토균형발전 혁신거점으로서의 완성에 의한 인구유입

《단계별 인구예측》

| 단 계 | 초기활력단계 | 자족적 성숙단계 | 완성단계 |
|---|---|---|---|
| | '07～'15 | '16～'20 | '21～'30 |
| 인구유입(천인) | 150 | 150 | 200 |
| 인구누계(천인) | 150 | 300 | 500 |

《 인구 및 고용 변화요인 》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직접 고용 및 인구증가
- 증가된 고용과 연관된 산업에서의 고용 및 인구증가
- 직·간접효과로 인한 인구의 자연적·사회적 요인에 의한 변화
- 자연적·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를 지원하는 산업의 고용변화
- 인구지원산업 고용변화에 따른 인구변화

## 2. 활력있는 도시구조

◇ 균형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환상형 도시 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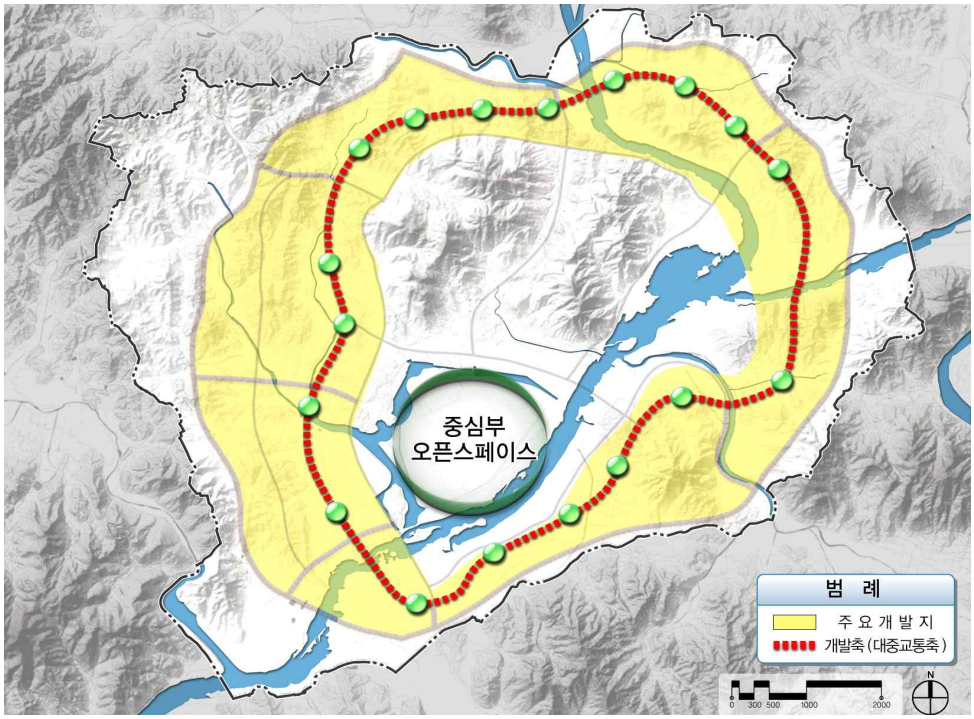
### 1) 도시 공간구조

□ 기본골격은 국가균형발전과 분권화시대를 상징하는 환상형 구조를 적용하고 공간이용의 균등성과 민주성을 도시구조에서 제시

※ 도시개념국제공모 당선자 선정이후 연구기관 합동토론회('05.11.29)와 전문가 자문회의('05.12.2) 등을 거쳐 환상형 도시구조를 선정

○ 도시의 개발이 주로 환상형 공간구조를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생활권을 균등하게 배치하여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

《 공간구조 구상 및 개발축 설정(안) 》



□ 환상형 구조의 중앙부는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공유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 오픈스페이스는 금강과 연계하여 친환경도시의 상징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변부는 문화·레저·스포츠 등 시민공동 이용시설을 배치

○ 오픈스페이스의 인접지역은 호수공원·수로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수변공간 조성과 경관창출이 가능하도록 구상

□ 개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구상

○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녹지축(국사봉~원수산~전월산) 및 하천축(금강, 미호천)이 보전되도록 개발축을 설정

○ 산지·녹지·수변공간은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수목원, 문화·레저·휴양 및 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휴식공간을 배치

□ 도시의 자연적 특성을 이용하여 쾌적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도시의 정체성이 표현되는 도시경관을 조성

○ 원수산·전월산 전면 기존 취락지는 도시 상징공간 및 교류공간으로서 특성화 공간으로 조성하며,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개발

○ 주민의 휴식·레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며 중심부 오픈스페이스로의 경관을 고려하여 도시의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계획

○ 하천변을 따라 주민의 휴식·레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도시의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계획

□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환상형 도시골격을 따라 대중교통수단이 순환하는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교통체계 조성

○ 개발축 양편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개발축의 중앙부근에 대중교통축을 배치

○ 생활권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반경 500m 내외로 설정하되 지형·지세, 보전지역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구성

○ 다양한 가로경관의 연출을 위해 대중교통축은 단조로운 직선이나 일률적인 원주형보다는 리듬있는 굴곡형으로 계획

□ 대중교통축을 보완하고 통과교통 처리 및 도시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는 외곽 순환도로를 계획

○ 국도 1호선은 도시내 외곽으로 우회시키고 내부순환도로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향후 교통량 변화 등에 따라 예정지역 바깥에서 우회처리 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

《 환상형 도시구조의 의의 》

- 환상(Ring)형 도시구조는 과거 집중형으로 개발된 신도시사례와는 달리 도시기능이 상당부분 분산되어 민주적이고 균형있는 도시 형성이 가능

- 혁신, 분권, 분산, 균형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는 분권화시대의 상징을 담아낼 수 있는 도시구조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21세기 국가 발전방향을 개념적으로 상징화

《 환상형 도시구조의 특성 》

○ 환상형 도시구조는 도심(CBD)과 주변지로 구성되는 기존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 등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시구조

- 기존 도시는 중심지로의 접근거리 단축을 중시하나, 환상형 도시는 접근시간을 중시하는 등 지식정보화시대의 특성을 반영

《 기존도시의 문제점과 환상형 도시가 갖는 대안 》

| **기존도시**(CBD 중심 구조) | | **환상형도시**(분산적 다핵 구조) |
|---|---|---|
| - 대부분의 활동이 중심지에서 발생해 지역커뮤니티의 활력 증대가 곤란 | | - 대부분의 활동이 생활권 단위로 이루어져 지역커뮤니티의 활력 증대가 가능 |
| - 직장과 주거지간 거리가 멀어 출퇴근 시간 증가 | | - 직장과 주거지간 거리가 가까워 출퇴근 시간 단축 |
| - 도심으로 접근하는 대중교통수단을 각 방향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비용이 증가하고 이용효율은 감소 | ⇨ | - 환상형 구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중교통체계 구축이 가능하여 비용이 절감되고 이용효율은 증대 |
| - 중심지로부터 거리에 따라 주택가격의 편차가 심함 | | - 도시기능의 분산으로 주택가격이 균형을 이룸 |

○ 환상형 도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 도시 전체가 환상형을 따라 균등한 발전이 되도록 대중교통축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선형으로 배치
- 대중교통축에 배치된 도시기능 주변으로 고밀도 복합토지이용을 하고 공원녹지 등을 배치하여 이용을 위한 교통거리를 단축
- 대중교통축을 중심으로 가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여유있는 가로공간을 확보

○ 환상형 구조는 선형도시의 장점(교통원활, 접근성, 기반시설 설치용이)을 강화하고 단점(일체감 부족, 이동거리 증가)을 보완하는 구조

- 환상형 축을 따른 기능분산배치, 환상형의 도시형태, 환상을 따라 설치되는 대중교통 및 환상형 중앙부에 위치하는 공원 등의 특징 보유

| | 선 형 도 시 | | 환 상 형 도 시 |
|---|---|---|---|
| 장점 | 주간선도로를 따라 교통의 흐름이 균일<br>배후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극대화<br>배후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을 완화 | 강화 | 환상형의 주교통체계를 따라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가능<br>도시중앙공원과 배후지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양호<br>핵형 개발에 비해 주변지역 관리가 용이 |
| 단점 | 간선도로를 따라 도시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br>생활권과 도시 전체와의 일체감이 떨어짐<br>도시중심부에 교통량이 집중되고 불필요한 통과교통이 과다발생 | 보완 | 환상형으로 도시 기본형태를 설정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br>도시 중앙공원 및 환상형 대중교통체계로 생활권과 도시 전체의 일체감 확보<br>교통량이 적절히 분산되므로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이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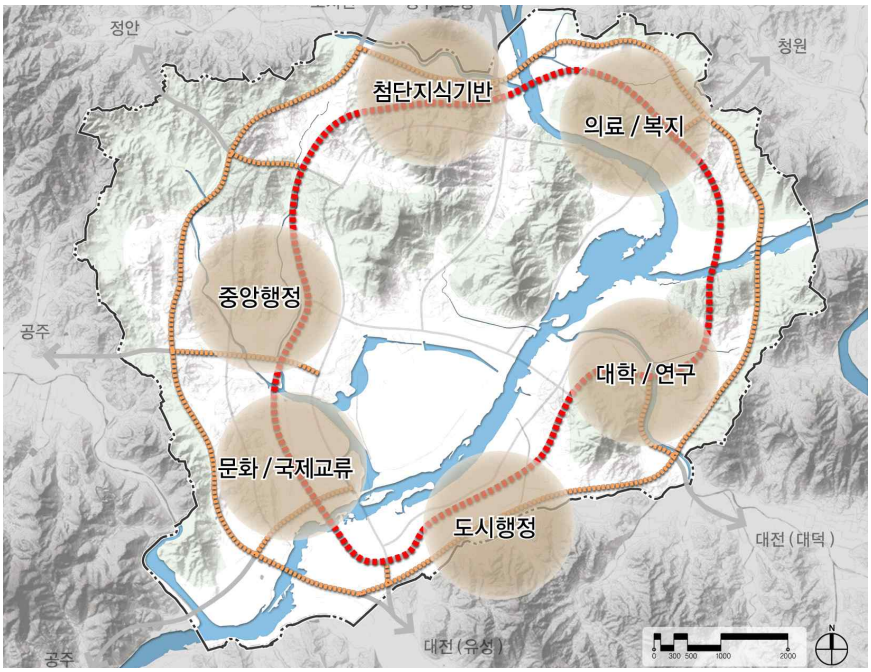
## 2) 도시 주요 기능의 배치

□ 도시를 균형 있게 형성하는 환상형 도시구조의 특성과 분산·분권의 이념을 담아낼 수 있도록 도시의 주요기능을 분산하여 배치

○ 도시기능은 도시내 지역적 입지특성과 인접 도시와의 광역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거점별로 배치

○ 일반적인 도시서비스를 지원하는 상업·업무기능은 대중교통축을 따라 연도형으로 배치하여 거점지역간의 연계 활성화를 유도

《 도시 주요 기능 배치 사례 》




《 거점별 배치기준 》

| | |
|---|---|
| ○ 중앙행정 | : 광역적 접근편의성, 상징성 |
| ○ 문화 / 국제교류 | : 중앙행정기능 및 수변공간 연계 |
| ○ 도시행정 | : 시민 접근성, 도시 균형성장 |
| ○ 대학 / 연구 | : 대덕 연구단지 등과의 연계 |
| ○ 의료 / 복지 | : 오송생명과학단지 등과의 연계 |
| ○ 첨단지식기반 | : 기존 산업단지 입지활용 고려 |

## 3. 생활권 계획

◇ **위계별 특성**에 따른 생활권 설정
◇ **대중교통중심**의 기초생활권 구상
◇ **공공시설 등의 복합화**를 통한 커뮤니티 공간조성

### 1) 생활권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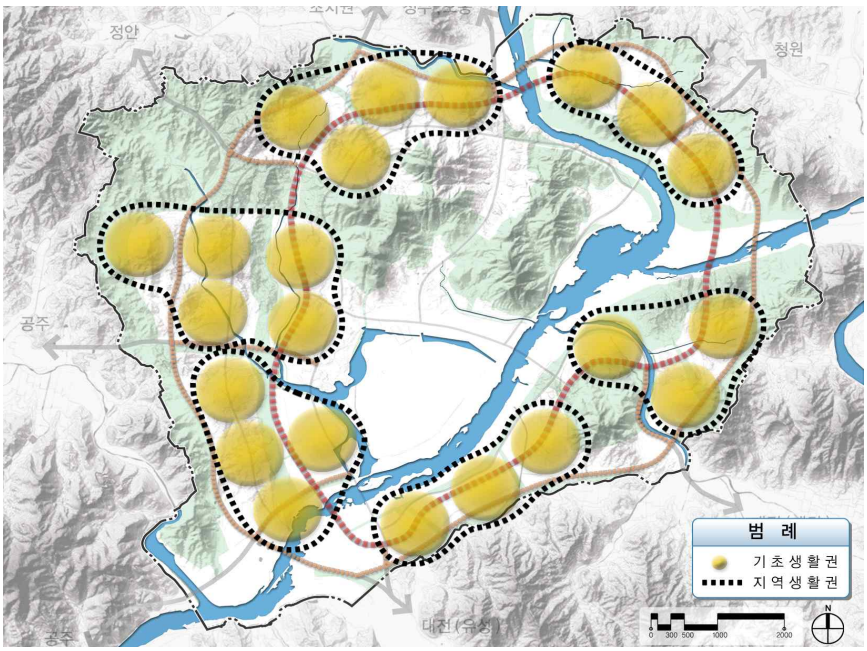
□ 생활권 단위의 특성과 위계에 따라 기초, 지역, 도시생활권으로 구분하여 도입기능 및 시설배치를 계획

○ 기초생활권은 독립적이고 특성화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구 2~3만인 규모로 하고 약 20여개로 계획

○ 지역생활권은 기능거점 권역별로 3~5개 기초생활권을 연계하여 위치 및 도입기능 특성에 적합하도록 계획

○ 도시생활권은 기초생활권의 총합개념으로 1개 단위로서 도시의 고유한 특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능배치를 계획

《 생활권 설정 개념도 》



## 2) 생활권 구상

□ 주민들의 편리성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정류장 및 연결보행도로를 중심으로 공공편익시설을 배치

○ 주거지에서 도보나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 등으로 각 생활권 중심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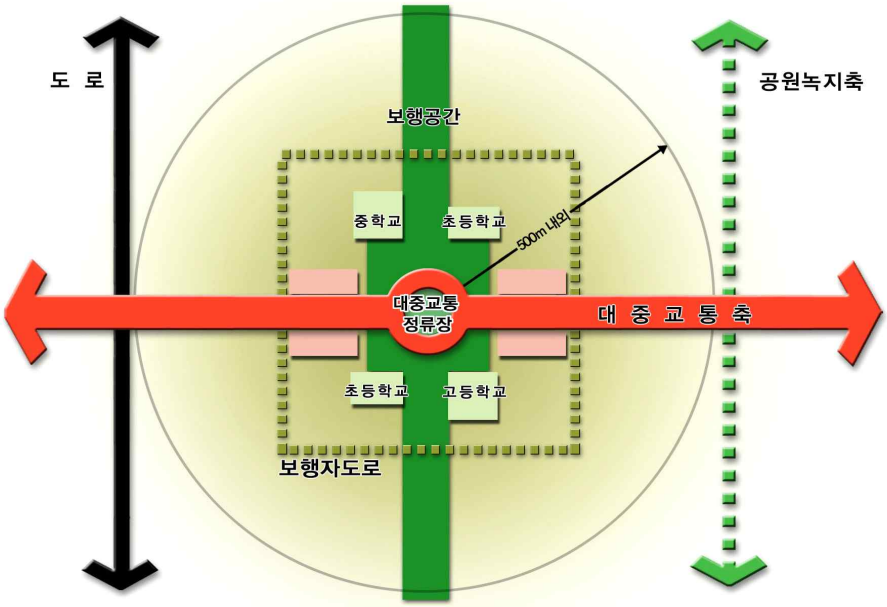
□ 생활권 중심은 주거, 상업, 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허용하여 주민교류를 촉진하고 주·야간 활력을 유지하도록 계획

○ 대중교통축 주변은 상업 및 중·고밀 주거형태로, 보행축 주변은 중·저밀의 연도형 주거형태로 구상

□ 각 생활권 단위의 도입기능 및 규모는 2~3만인 정도의 인구 규모에 적합하게 설정하되 생활권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

○ 생활권의 중심에는 주민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커뮤니티센터를 입지시키고 복합화를 추진

《 생활권 구상 개념도》



### 3)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생활권별로 공공시설·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복합화하여 효율성 제고

○ 대중교통축에 인접한 복합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민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심리적 결합성을 제고하고 도시이념을 실현

○ 프로그램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계·통합이 가능한 시설을 통합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 커뮤니티시설 복합화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시설물 관리주체의 예산절감과 관리의 효율성 제고

○ 공공시설을 복합화하여 시설투자비를 절감하고 이용률 증대와 관리비 절감 및 수요변화에 탄력적 대응

○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하던 일부 민간시설도 복합 설치하여 입주자 편의 및 시너지 효과 제고

□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복합화가 가능한 시설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 공공서비스 시설 중 도시전체 차원 또는 상위 생활권에서 필요한 시설을 구분하여 설치방안 마련

○ 다양한 시설 운영주체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운영 협의체 구성·운영 등 관리방안 강구

《 기초생활권별 복합가능 시설 예시 》

○ 교육시설 : 유치원・초등학교(각 2개소), 중학교(1개소), 고등학교(1개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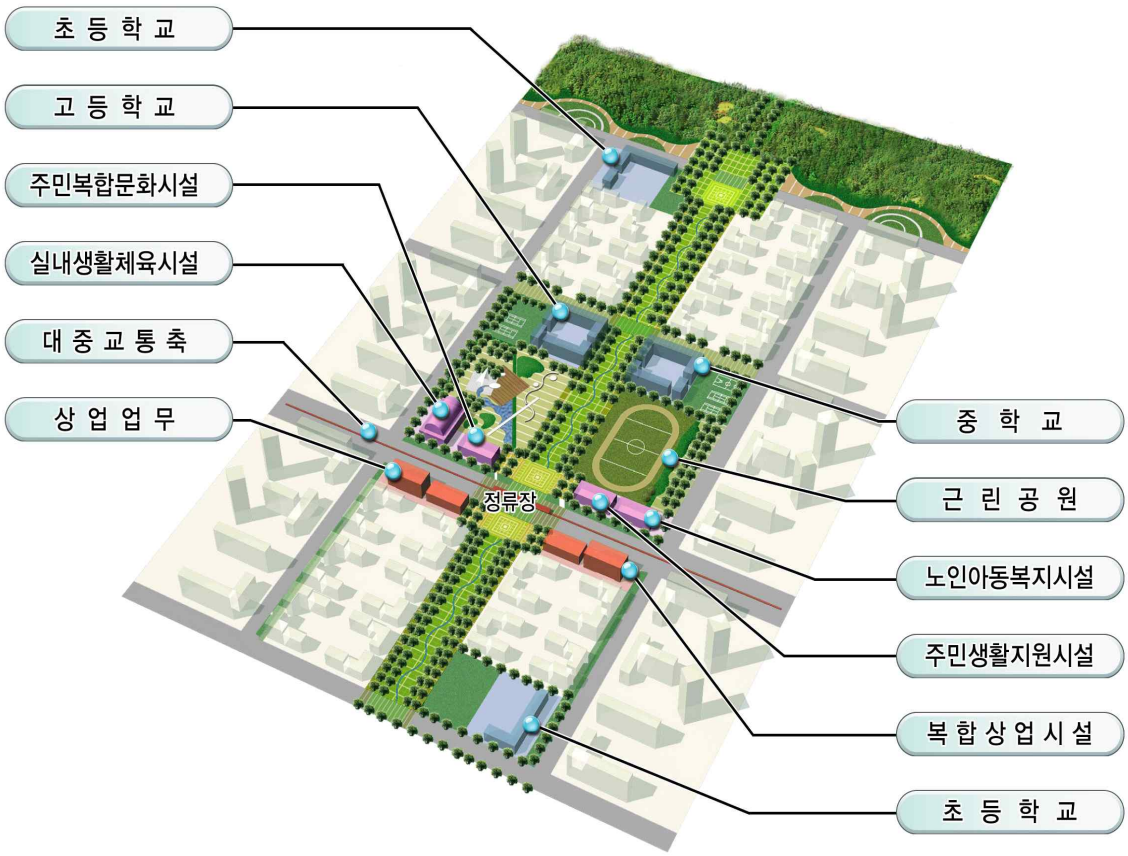
○ 근린공공시설 : 동사무소, 보건지소, 경찰지구대 등

○ 근린구매시설 : 슈퍼마켓, 근린상가 등

○ 근린복지시설 :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 근린문화체육시설 : 문화의 집, 도서관, 실내체육관, 근린공원 등

《 커뮤니티공간 구상 예시도》



## 4. 토지이용의 기본방향

◇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등을 50%이상 확보**
◇ **'先 보전지역 설정 - 後 기본계획 수립'** 추진

### 1) 보전지역 및 가용토지 설정

□ 예정지역 면적의 50% 이상을 공원·녹지 및 친수공간 등으로 설정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

○ 녹지보전지역은 국사봉~원수산~전월산을 잇는 녹지축을 중심으로 설정하되, 예정지역 면적의 30% 내외 수준으로 계획

○ 하천보전지역은 금강과 미호천 및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주변 공원녹지와 연계하여 설정하되, 예정지역 면적의 20% 내외로 계획

※ 주요 신도시 및 해외도시 공원·녹지·친수공간 비율
분당 27.4%, 일산 23.1%, 판교 34.0%, 푸트라자야(말레이지아) 37.6%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 있는 지역을 초기단계부터 우선 설정한 후 도시건설에 필요한 가용토지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

○ 환상형 도시공간구조 구현 및 중심부 오픈스페이스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가능지를 환상형으로 설정

○ 주택건설용지는 자연지형 활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감안하여 순인구밀도 300인/ha 내외 수준으로 계획

## 2) 주요 용도별 토지이용구상

### 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택건설용지

□ 순인구밀도 300인/ha 내외를 유지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규모를 예정지역 면적의 22% 내외로 계획

※ 주택건설용지 규모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할 계획

□ 주택건설용지는 대중교통축 양쪽에 배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

○ 도시경관 및 토지이용을 고려한 다양한 밀도를 구상하고 가로 활성화를 위해 상업용지 등 다른 용도와 연계·배치토록 계획

### 나) 활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한 상업·업무용지

□ 도시활동 서비스 및 탄력적인 도시기능 확보를 위한 상업·업무용지 규모는 예정지역 면적의 3% 내외로 계획

○ 호텔·컨벤션센터 등 국제교류기능과 대형마트 등 유통시설, 대중교통축 주변의 상업·업무시설 등을 감안하여 확보

□ 상업·업무용지는 대중교통축을 따라 배치하여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며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구상하여 직주근접을 유도

○ 대중교통축에 위치한 정부청사·국제교류·문화 등 거점기능과 연계한 다양한 상업기능(테마거리)을 조성하여 도심활력 증진 유도

### 다) 도시 자족성 확보 및 첨단산업을 위한 산업용지

□ 기존의 월산산업단지 입지와 주변의 지역 거점기능(첨단지식기반)과의 연계방안을 도출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

○ 산업단지는 100만㎡ 내외로 확보하고 주변 지원시설 및 상업시설 등을 인접 배치하여 지역생활권의 활성화를 유도

※ 향후 여건변화 및 산·학·연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산업기능이 유치될 수 있도록 타지역에 도시형공장 및 복합적인 용도 부여가 가능하도록 추진

□ 첨단지식기반기능 수용 및 자족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월산산업단지를 첨단 산업단지로 변경토록 계획

○ 주변도시 산업과의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첨단산업·영상·문화·정보 등 관련 산업을 유치하여 도시형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라) 환경친화적인 녹지 및 미래수요에 대비한 유보지 확보

□ 원수산과 전월산을 잇는 녹지축과 중심부 오픈스페이스를 녹지로 설정하는 등 공원·녹지·하천 등은 예정지역 면적의 50% 이상으로 확보

□ 향후 여건변화에 탄력대응하기 위해 예정지역 면적 1% 이상을 미래지향적 유보지로 확보하되, 원수산 및 전월산 남쪽의 중앙부 오픈스페이스와 면한 지역중 일부를 유보지로 설정

### 마) 효율적인 도시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시설용지

□ 적절한 규모의 공공시설 확보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시설용지는 녹지 등을 제외한 가용토지면적의 25% 내외로 계획

□ 도로·저류지·공급시설 등을 위한 공공시설용지는 기능 및 특성, 주변 토지이용 등을 감안하여 적지에 배치

# 5. 도시건설지표

## 1) 주요 도시건설 지표

| 부 문 | 관련항목 | 계획지표 | 비고 |
|---|---|---|---|
| 인 구 | 목표 인구 | 50 만인 | 2030년 기준 |
| 주 거 | 세대당 가구원수 | 2.5 인/세대 | 평균치 |
| | 주택공급량 | 20 만호 | |
| | 주거지밀도(순밀도) | 300 인/ha 내외 | |
| | 기초생활권 규모 | 2~3 만인 내외 | |
| | 기초생활권 개수 | 20개 내외 | |
| 상 업 | 상업・업무 | 예정지역 면적의 3% 내외 | 국제교류, 호텔, 유통 등 포함 |
| 공 업 | 첨단지식기반시설 등 | 100만㎡ 내외 | |
| 녹 지 | 공원·녹지율 | 예정지역 면적의 50% 이상 | 공원・녹지, 하천 등 포함 |
| | 하천변 녹지 폭원 | 40m 내외 | 국가하천 |
| | | 20m 내외 | 지방하천 |
| | 근린공원 | 1만㎡ 이상 | 기초생활권 단위 |
| | 묘지공원 | 1개소 내외 | 도시생활권 단위 |
| 공공청사 | 중앙행정 | 20~40만㎡ 내외 | 12부 4처 2청 등 |
| | 지방행정 및 공공기관 | 60만㎡ 내외 | 이전대상 공공기관 포함 |

| 부 문 | 관 련 항 목 | 계획지표 | 비고 |
|---|---|---|---|
| 상하수도 | 1인당 1일 평균 급수량 | 300~350ℓ | |
| | 하천(계획홍수빈도) | 200년 | 국가하천 |
| 교 통 | 환상형 대중교통축(연장) | 20km 내외 | |
| | 환상형 대중교통축(폭원) | 40~50m 내외 | 자전거 및 보행공간 포함 |
| | 여객터미널 | 2개소 내외 | |
| | 대중교통전용지구(Transit mall) | 2~6개소 | |
| | 전국 주요도시 접근성 | 2시간 내외 | |
| | 도로율 | 10% 내외 | |
| 교 육 | 유치원 | 40개 내외 | 기초생활권당 2개소 내외 |
| | 초등학교 | 40개 내외 | 학급당 학생 수 20~25인 |
| | 중학교 | 20개 내외 | |
| | 고등학교 | 20개 내외 | |
| | 대학교 | 2개 내외 | 전문대학원 별도 |
| 문 화 | 주민복합문화시설 | 20개 내외 | 기초생활권 단위 |
| | 실내생활체육시설 | 20개 내외 | |
| | 박물관 | 각 1~2 개소 | 도시생활권 단위 |
| | 미술관 | | |
| | 전문공연시설 | | |
| | 중앙도서관(미디어테크) | | |
| | 종합체육시설(Complex) | | |
| 복 지 | 근린아동복지시설 | 20개 내외 | 기초생활권 단위 |
| | 근린노인복지시설 | 20개 내외 | |
| | 종합장애인복지시설 | 각 1~2 개소 | 도시생활권 단위 |
| | 종합가족복지시설 | | |

※ 개발계획단계에서 구체화될 예정

## 2) 토지이용 구상표

| 구 분 | 예정지역 면적 대비 비율(%) | 비 고 |
|---|---|---|
| 보전용도 | 50% 이상 | 공원・녹지, 하천, 중심부 오픈스페이스 등 포함 |
| 개발용도 | 50% 이하 | |
| 주택건설용지 | 22% 내외 | |
| 상업・업무용지 | 3% 내외 | 호텔, 컨벤션, 유통시설 등 포함 |
| 중앙행정 | 1% 내외 | |
| 지방행정 및 공공기관 | 1% 내외 | 공공기관 이전대상 포함 |
| 문화・복지・교육・의료용지 등 | 4% 내외 | 대학교 및 실버타운 포함 |
| 첨단산업용지 | 1% 내외 | |
| 레저・스포츠 용지 | 2% 내외 | |
| 공공시설 용지 | 13% 내외 | 도로, 주차장, 저류지, 공급처리시설 등 포함 |
| 유보지 | 1% 이상 | |

※ 동지표는 토지이용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면적은 개발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정함

# Ⅴ. 부문별 도시 개발방향

1.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지계획
2. 환경친화적인 생태순환도시
3. 아름답고 개성있는 녹색도시 조성
4. 편리하고 인간중심적인 교통체계
5. 시민친화적이며 효율적인 청사 배치
6. 수준높은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기관 배치
7. 다양하고 질 높은 선진 교육환경 조성
8. 품격높고 풍요로운 문화인프라 구축
9.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복지인프라 구축
10. 안전한 도시를 위한 방호 및 방재계획
11. 미래지향적인 첨단 정보 · 통신계획
12.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
13. 경제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조성

# 1.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지계획

◇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미래형 주거지 조성
◇ 다양한 유형의 개성있는 주택의 공급

## 1) 미래형 주거지 조성

□ 주변의 수림 및 자연지형을 보존·활용하고 다양한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도시외곽의 녹지축과 연계한 하천변 녹지축을 확보하고, 단지내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도시전체의 유기적인 생태네트워크를 구성

□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된 녹색교통(보행, 자전거) 연결체계를 구성하여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

○ 도로에 의한 녹색교통축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행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연계체계 및 환승시스템을 구축

□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생활권별로 공공시설의 복합화로 다양한 문화·복지수요를 충족

○ 기존 자연 및 역사환경과 조화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지구내 복합커뮤니티와 연계하여 다양한 주민친화형 문화공간 조성

○ 주거지내에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원하는 생활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저류지, 투수층 확대 등의 방재시설 완비와 단지계획에 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을 반영하여 안전한 주거지 조성

## 2) 주택 공급구상

□ 생활권별로 지역의 특성과 도시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주거지 유형을 개발·공급하여 도시의 정체성 확보

□ 도시의 기능과 성격 및 미래의 선호도를 감안한 미래형 주거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

○ 단계별 인구유입에 따라 주택의 유형, 규모 및 공급방법 등을 다양화하여 원활한 주택공급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 일부 생활권은 원형지 형태의 토지 공급, 설계공모 방식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이고 다양한 주택유형 공급을 유도

□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미래의 가구특성 변화를 수용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주거양식을 도입

○ 중밀도 이하 주거단지를 90%이상 배분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 조성

《 주택 공급구상(안) 》

| 주택밀도 | 저밀 | 중저밀 | 중밀 | 고밀 |
|---|---|---|---|---|
| 주요 주택유형 | 단독·연립주택 등 | 중저층 공동주택 등 | 중고층 공동주택 등 | 도심형 공동주택 등 |
| 용 적 률 | 100% 이하 | 100 ~ 150 % | 150 ~ 200 % | 200% 이상 |
| 세대 공급비율 | 7 ~ 10% | 15 ~ 20% | 60 ~ 70% | 7 ~ 10% |

※ 상세한 주택공급구상은 개발계획에서 제시

□ 임대주택은 도시의 행정중심기능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임대비율 등을 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은 가급적 장기임대주택으로 개발

※ '96~'05년 전국 임대주택 비율 : 19%(504천호 신규주택중 98천호)

### 3) 주거지 밀도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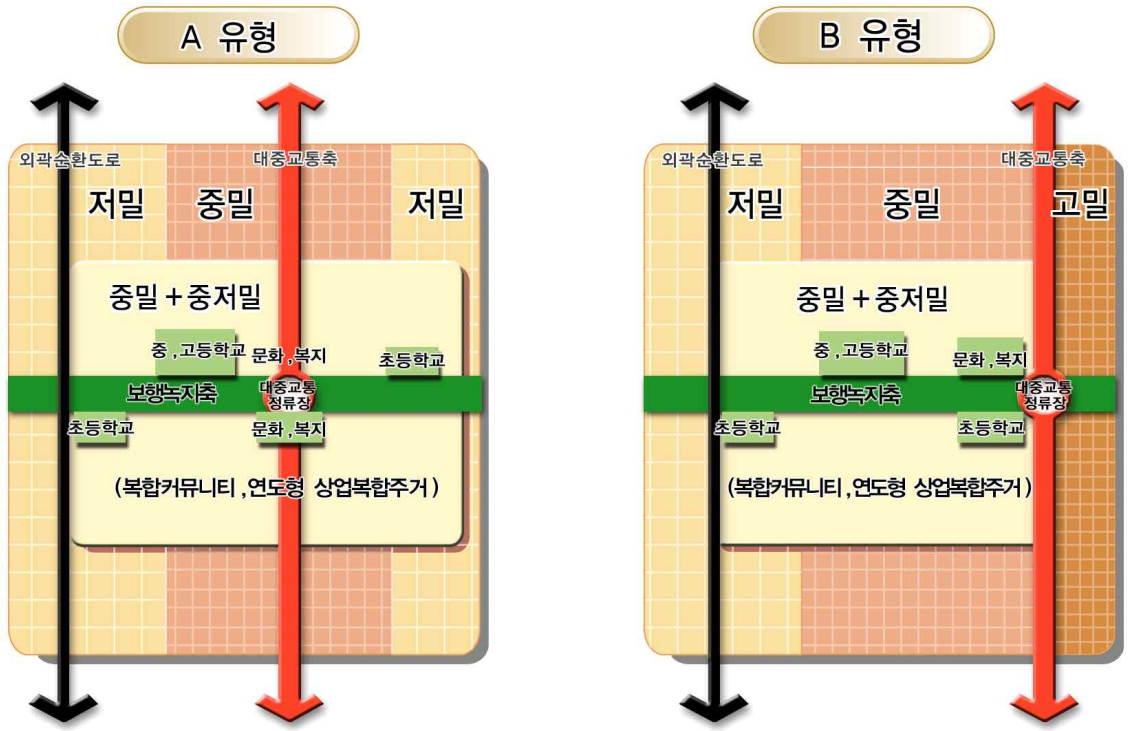
□ 주거지의 밀도는 생활권 위치별로 도시 경관 및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다양한 밀도로 구성

□ 기초생활권의 중심부분은 중·고밀주거지를 배치하여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하도록 함

○ 보행녹지축 주변은 경관을 고려하여 중·저밀의 연도형 주거형태로 구상

○ 외곽순환도로 주변이나 구릉 등에는 소음저감 및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저밀주택을 공급

《 주거지 구상 개념 예시 》




※ A 유형 : 생활권 중심으로 대중교통축이 통과하는 형태
B 유형 : 생활권 중심을 벗어나 대중교통축이 통과하는 형태

## 2. 환경친화적인 생태순환도시

| |
|---|
| ◇ 녹지축, 하천축을 연계한 **블루-그린(Blue-Green) 네트워크**를 구축 |
| ◇ 자원순환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조성 |

### 1) 환경 보전지역 설정

□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동·식물 등 환경·생태조사를 실시하여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

○ 전문연구기관과 민간전문가·NGO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대해 객관적인 환경·생태조사를 시행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녹지축 및 하천축 등 주요 보전지역을 설정하여 생태계 보전방안을 강구

□ 환경·생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진

○ 개발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해 환경목표 및 환경계획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추진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장기화에 대비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환경관리계획 등 수립

□ 환경친화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환경생태계획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도시구상에 반영

○ 백두대간 금북정맥에서 이어지는 녹지 흐름을 보존하고 원수산, 전월산 등 주요 산림을 연결하는 광역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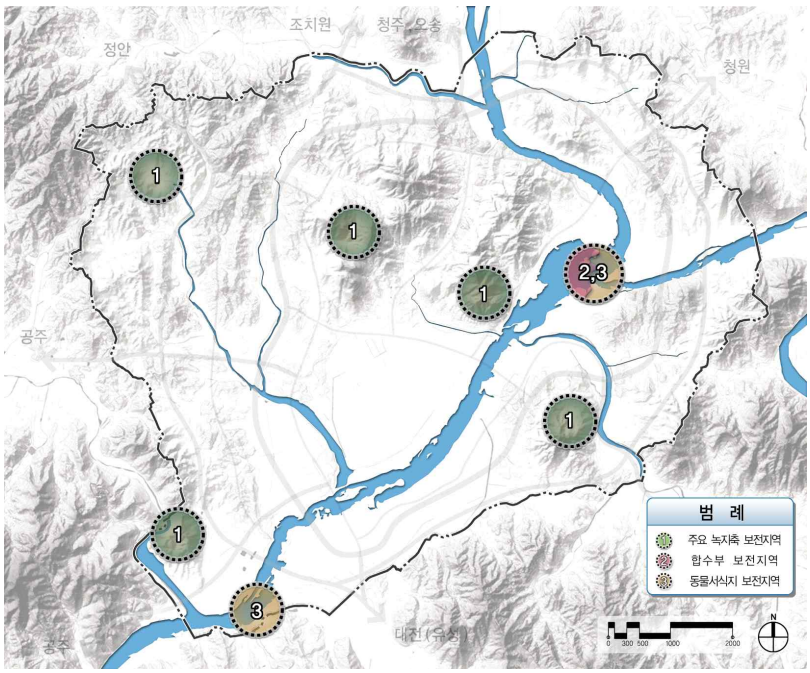
○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수부는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환경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므로 생태거점으로 조성

○ 생태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원, 녹지 및 친수공간 면적을 50%이상 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개발

○ 주요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은 최대한 보전하면서 공원, 녹지, 친수공간 등 가능한 환경친화적 이용을 유도

○ 도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외부로부터 오픈스페이스 및 도시내 주요 지역으로 이어지는 바람통로를 확보

《 주요 보전지역 구상도 》



## 2) 생태 네트워크 구축

□ 환경·생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녹지축(Green Network)과 하천축(Blue Network)을 총괄하는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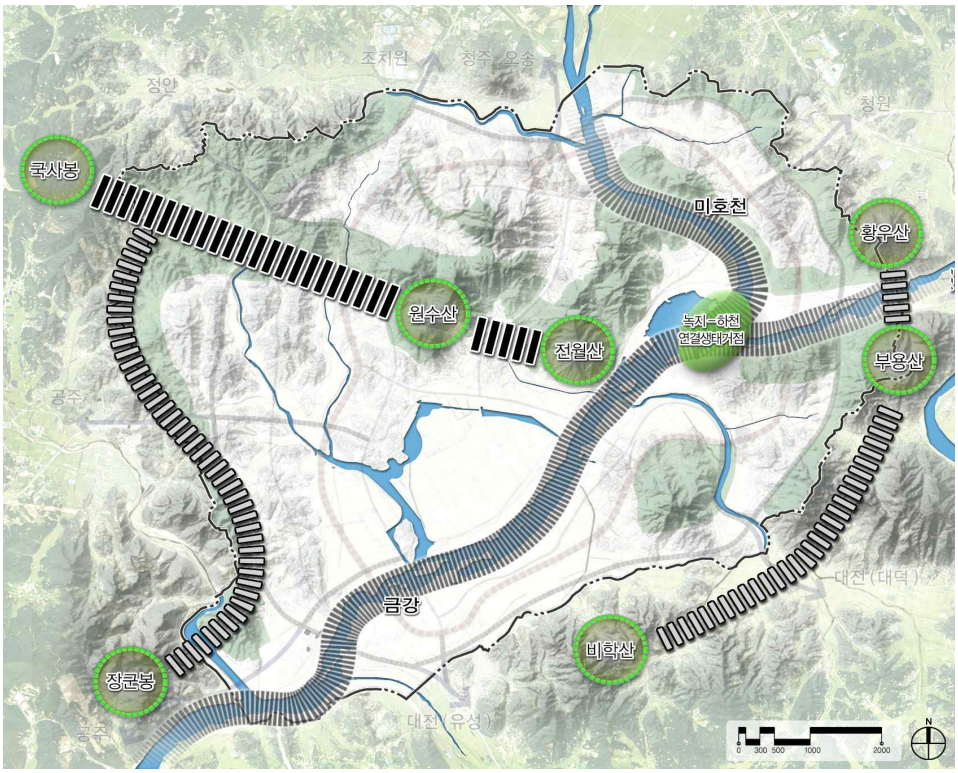
○ 국사봉, 원수산, 전월산 등을 거점으로 하는 주녹지축과, 도시를 순환하는 부녹지축, 금강·미호천을 중심으로 하는 하천축을 연계

※ 주녹지축 : 국사봉 - 원수산 - 전월산
부녹지축 : 국사봉 - 장군봉, 황우산 - 부용산 - 비학산

○ 생태 네트워크(Blue-Green Network)를 통해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주민에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생태 네트워크에 도로 등의 시설이 설치될 경우 동·식물의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 등을 조성하여 생태 네트워크 단절 방지

《 생태 네트워크 구상도 》



### 3) 환경순환 시스템 도입을 통한 자원절약형 도시건설

□ 물, 에너지 및 폐기물이 연계 순환하는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소비를 최소화 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을 추진

○ 중수도를 도입하고 공공건물, 대형건물 등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오수·우수를 활용하는 물순환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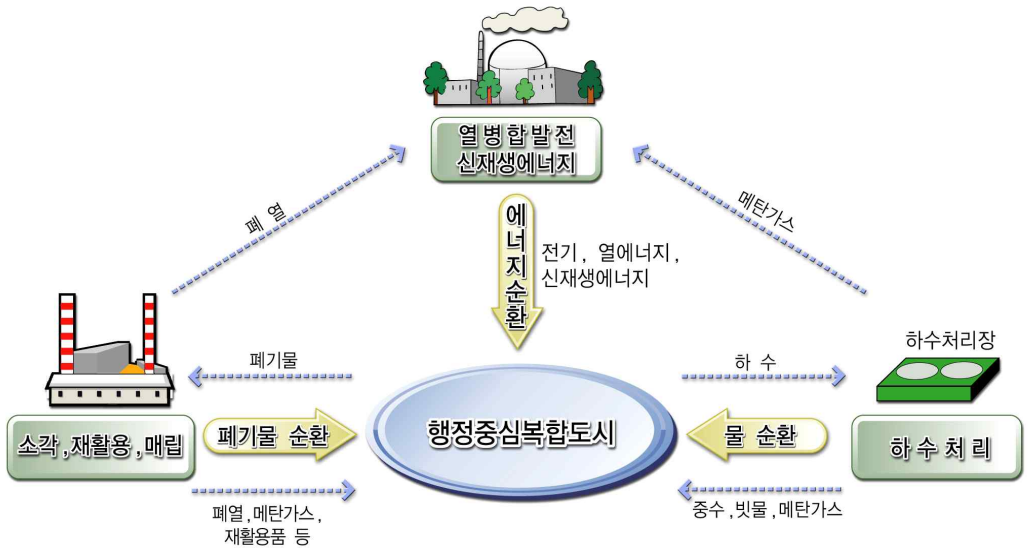
○ 도시내 불투수면을 줄이고 우수 침투시설 등을 설치하여 비점오염물질이 자연 정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폐기물은 관로수송시스템을 도입하여 위생적·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자원화

○ 가연성 폐기물 소각열은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재활용하여 폐기물과 에너지간의 순환시스템을 구축

○ 전기·에너지 공급시 청정에너지(LNG 등) 및 자연에너지(태양열 등)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도입

《 자원순환시스템 개념도 》



## 3. 아름답고 개성있는 녹색도시 조성

◇ 환경친화적이고 다양한 **공원·녹지 및 수변공간** 조성
◇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

### 1) 환경친화적이고 다양한 도시 공원·녹지 조성

□ 도시 내·외의 녹지, 수변공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계하고 녹지와 수변공간에 대한 시민 접근성 제고

○ 생활권 사이에 쐐기형 녹지 등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요 녹지축과 연계

○ 공원·녹지를 연결하는 보행로, 자전거 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구상하여 시민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

○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자연형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호수, 옥상녹화, 생태공원 등 다양한 비오톱(Biotope)을 설치

□ 생활권별로 다양한 규모·형태의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레저공간 제공

○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근린공원을 배치하고 생활권 특성을 고려하여 근린공원의 규모·성격을 차별화

○ 어린이공원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근거리에서 이용가능토록 하며 접촉과 교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공원별 차별화 추진

○ 소공원은 도로 모퉁이, 오피스 건물 사이의 소규모 토지 등에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특색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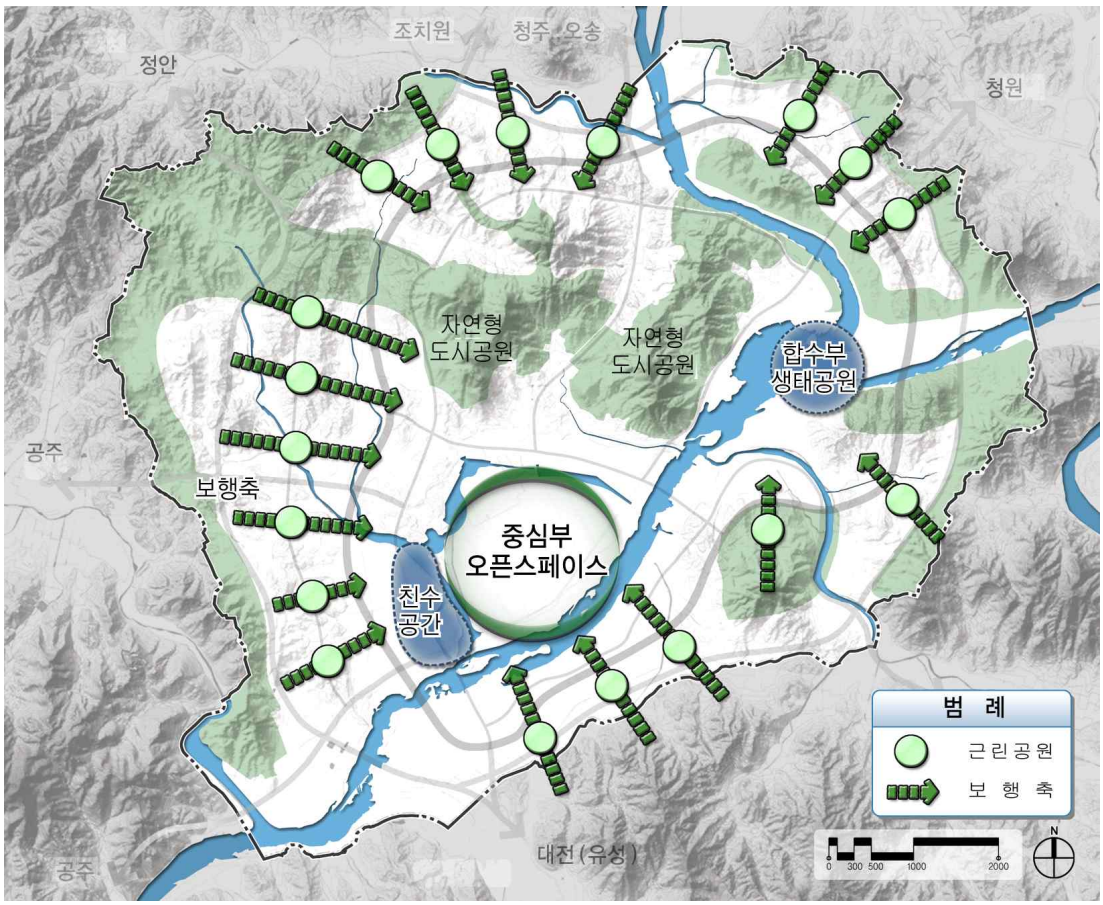
□ 주요 녹지, 하천, 문화유산 등 기존 여건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제공원(Theme Park)을 적극 배치

○ 시민들이 자연과 생태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주요 동식물 서식지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 등에 자연생태공원을 설치

○ 예정지역내 문화유적 및 전통문화 등을 보존하고 시민이 학습·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포함하는 역사·문화공원 조성

○ 기타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주말농장, 산림욕장, 체육공원 등 다양한 주제공원을 배치하여 시민에게 여가활동공간 제공

《 도시 공원·녹지 구상도 》



## 2) 도시 중심부 오픈스페이스 구상

□ 도시를 환상형 구조로 개발함에 따라 도시 중심은 도시의 상징공간이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

○ 도시내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모든 시민이 공유하고 휴식할 수 있고 도시를 상징하는 오픈스페이스로 조성

○ 자전거도로·보행자도로와 녹지축·하천축 등 생태네트워크가 만나고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조화의 공간으로 조성

□ 도시 중앙에 위치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복합적 성격의 공원으로 조성

○ 오픈스페이스 내부 및 주변지역은 문화·체육·레저시설 등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민친화적 시설을 배치

※ 구체적인 조성방안은 국제공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립

《 중심부 오픈스페이스 배치 예시도 》

### 3) 하천변 수(水)공간 조성

□ 국가하천 및 주요 지방하천을 따라 환경친화적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도시 어메니티를 증진

○ 하천은 가능한 자연형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생태공원, 수변식생대 등을 조성하여 하천생태를 보전

○ 하천변 제방은 경사를 완화하여 치수안전도를 향상시키고 고수부지와 연계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 금강·미호천 등 주요 하천 구간을 지형 여건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보전·복원·친수구간 등으로 나누어 관리

○ 친수공간은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축 및 주거·문화·상업시설과 연계하고 보행교, 인공호수 등을 도입

○ 보전·복원 구역은 자연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고 보행공간,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하여 하천으로의 접근성 제고

□ '물이 있는 도시'로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한 하천 수질 및 수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자연정화기법, 식생정화기법 등 환경친화적인 하천수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

○ 수중보 설치, 대청댐 방류량 증가 등 하천의 수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되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환경영향을 최소화

### 4) 매력적인 도시경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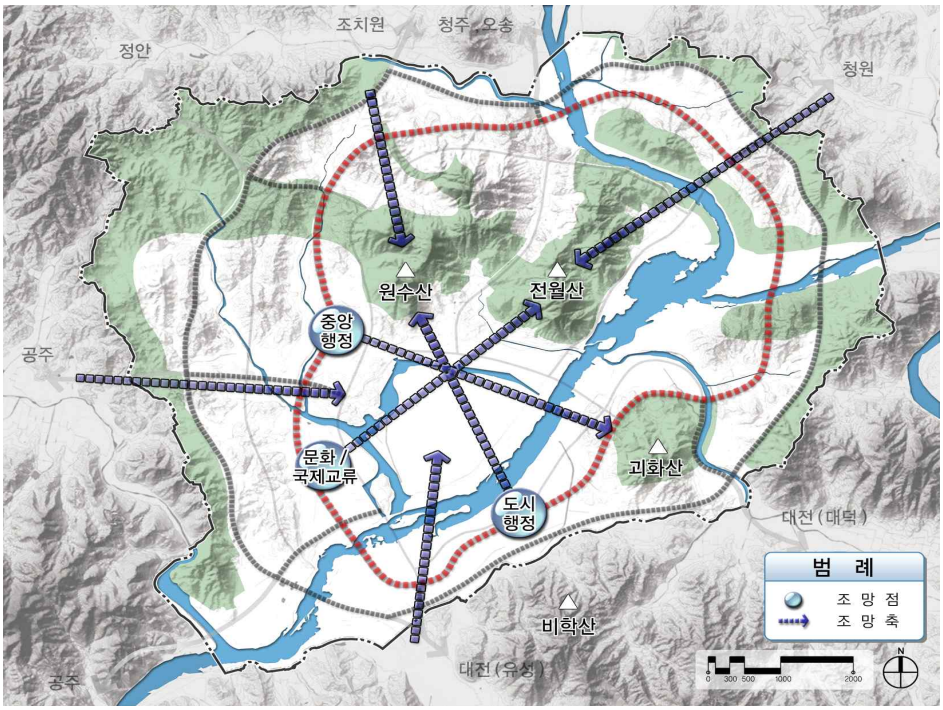
□ 경관자원 분석을 통해 주요 조망점 및 경관축을 설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관형성을 도모

○ 진입도로·도시거점 등 주요 조망지점에서 원수산·전월산·괴화산·오픈스페이스 등의 경관자원을 볼 수 있도록 조망축을 설정

○ 지역별로 개성있고 도시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경관지침을 마련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

○ 건축물·교량 등 도시경관과 산지·하천 등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도록 도시전체의 스카이라인을 형성

《 주요 조망점 및 조망축 조성(안) 》




※ 주요 경관축을 조성하여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 국도1호선·36호선 등 도시진입도로에서 전월산 또는 원수산을 조망하는 축
- 주요 도시기능 거점에서 원수산과 전월산, 괴화산 등을 잇는 경관축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체성 및 이미지를 확립하고 도시의 상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경관을 형성

○ 환상형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도로의 위계, 장소성, 방향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축 경관을 조성

○ 대중교통축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주요 경관자원과 연계된 보행위주의 특화가로 조성

○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 지역에 상징성·조형성 및 디자인이 우수하고 다양한 공공미술품을 설치하여 도시미관 제고

□ 미시적 경관강화를 위해 세부 경관과제를 설정하여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하위계획에 반영하고 경관관리를 도모

○ 건축물 미관, 옥외광고물, 조경설계 등 세부 경관과제를 설정하고 각 과제별 경관지침을 수립하여 도시 경관관리를 강화

※ 건축물 미관, 옥외광고물, 도시환경색채, 야간경관, 공원·녹지 수변공간, 공공시설물, 도시구조물 등 7대 경관과제를 선정, 세부 경관지침을 마련하여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 건축적·문화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함으로써 우수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도시품격 향상을 도모

○ 설계경기, 시범사업, 인증제도 등을 통해 미적·기능적으로 우수한 건축물, 교량 등을 건설하여 도시의 미관향상을 도모

□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이미지 및 경관 변화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시 이미지 및 경관을 단계별로 계획

○ 도시의 단계적 개발에 따라 도시경관이 미래 여건에 맞추어 유연하게 변화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경관형성 전략을 수립

### 5) 미래 장사문화를 선도할 선진 묘지공원의 조성

□ 납골제도 개선, 산골제도 도입 등 정부의 장사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미래 장사문화를 선도할 선진 장사시설을 배치

○ 도시구상 단계부터 장사시설을 고려하여 예정지역내 기존묘지 이전대책을 마련하고 장사문화의 모범사례를 마련

○ 장례식장, 화장장, 추모공원, 자연장(수목장, 산골시설 등), 납골평장시설 등을 모두 갖춘 종합 장사시설을 배치

○ 매장묘지는 지양하고 화장(火葬) 후 납골평장, 자연장 등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설치

□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하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시민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 주변의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수목원, 산림욕장, 체육시설, 휴양시설, 편의시설, 산책로 등을 배치

○ 화장시설, 납골시설, 자연장 등 장사시설의 설계 및 배치시 조경 등을 통해 시민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스웨덴 우드랜드 공원묘지 사례 》

(장례식장, 화장시설 및 조경)

(봉분이 없는 납골평장)

## 4. 편리하고 인간중심적인 교통체계

◇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내외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
◇ 주변도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연계교통체계** 구축
◇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교통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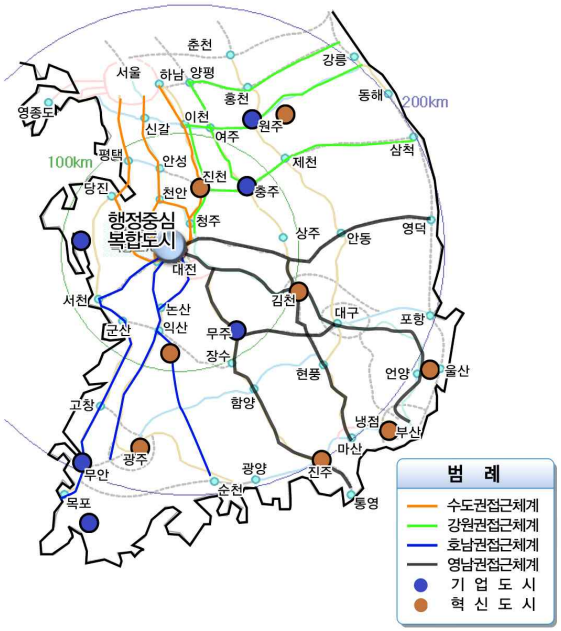
### 1) 국가기간 교통망체계

□ 전국 주요도시 및 혁신도시에서 2시간 내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간선교통체계를 정비하여 전국적 접근성을 제고

○ 경부고속국도, 경부고속철도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을 통과하는 간선 교통망과 주요도시간 연결교통체계를 정비・확충

○ 강원권, 영남권(경북 북부, 경남 서남부), 호남권 등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철도 등 간선시설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강화

《 전국 주요도시에서 접근도 》




※ 국가기간교통망 정비방향

- 강원권 : 제천~삼척~동해 고속국도 및 강릉~원주~제천 복선전철화 적기건설 및 충주~원주간 일반국도 등 조기개선
- 영남권 : 청원~상주~영덕 고속국도 및 대구~부산 고속철도, 김천~진주 전철화 사업 등의 적기 건설
- 호남권 : 호남고속철도, 전라선 복선전철화 및 서천~공주 고속국도 등 적기 건설

## 2) 광역교통체계

□ 전국 주요도시 및 충청권 주요 지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간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광역교통체계 정비·확충

○ 청주국제공항 및 고속철도(오송역 등)와의 연계교통체계를 확충하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도심공항터미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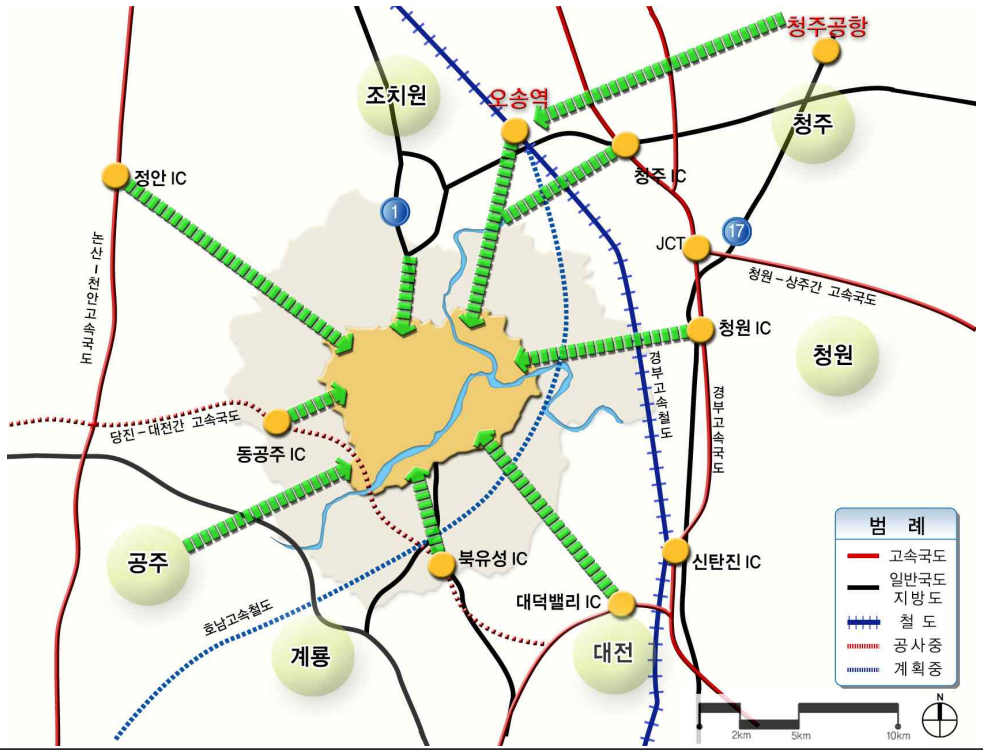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한 충청권 주요도시간 및 도로·철도 등 간선교통시설간의 효율적 교통연결체계구축 및 환승시설배치

○ 지역간 교통량의 도시내 통과를 감소시키고 도시내 원활한 교통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방사·순환형 교통망 구축

□ 충청권 주요지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

※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대중교통운영대책과 광역교통시설 개선방안 및 재원분담, 우선순위 등 장·단기 사업시행방안 등을 제시

《 주변도시 및 기존 교통시설과의 접근 개념도 》



## 3) 도시교통체계

### 가) 교통 수요 관리형 교통체계

□ 교통 수요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TOD)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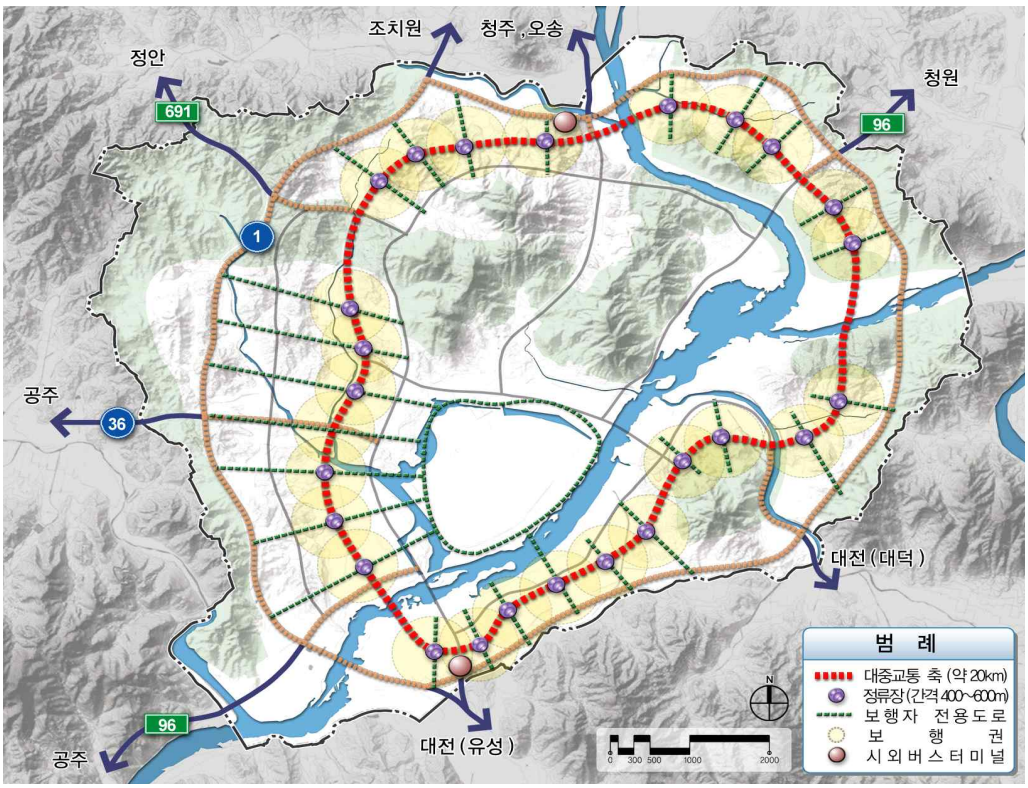
○ 환상형 대중교통중심축을 따라 도보권내에 도시의 주요 기능을 배치하고 생활권역간 차량 통행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TOD(Transit Oriented Developement) : 토지이용 및 도시개발과 교통계획의 상호연계성을 중시하는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

□ 가로망과 주차시설은 승용차의 통행수요를 절감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도록 적절한 용량과 배치 계획을 수립

□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보장하여 승용차 이용에서 자전거·보행 등 녹색교통수단 이용으로의 전환을 유도

《 도시교통체계 구상 개념도 》



## 나)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존중의 녹색교통체계를 구현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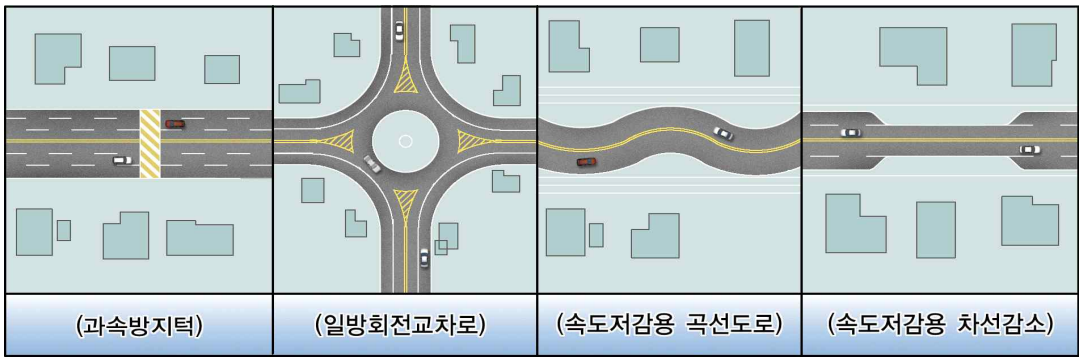
○ 자전거와 도보로 청사, 정류장, 학교 등 도시전역을 다닐 수 있도록 녹지대와 연계하여 자전거 도로망과 산책로를 조성

《 녹색교통체계 조성사례 예시도 》

□ 장애인·노인·아동 등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교통권 부여 및 교통무장애도시 구현

○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가 및 학교 등에는 교통정온화기법(Traffic Calming)을 통해 교통환경을 제고

《 교통정온화기법 예시도 》



### 다) 지능형교통체계 및 물류시스템

□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제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

○ 실시간 교통정보 및 대중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첨단신호제어 및 돌발상황관리체계 등 구축

《 ITS 서비스 개념도 》

□ 환경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첨단 물류망(Smart 물류망) 구축으로 저물류 도시를 지향하며 수요에 따라 단계별로 물류시설을 배치

○ 초기에는 도시 내 유통시설과 연계한 부속물류시설 위주로 하고 향후 도시외곽의 복합물류센터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물류망을 구축

○ 유통지구 배치와 연계한 물류망 형성을 유도하며 복합물류센터는 외곽간선도로망에 인접 배치하여 도시물류 집배송시설과 연계

### 4)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 일반버스, 신교통수단(첨단 BRT 등), 기간철도 등 각 대중교통 수단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환승정류장, 환승주차장, 복합 환승센터 등을 설치

□ 청주국제공항, 고속철도역(오송역 등) 및 인근 도시 지하철역 등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축 구축

○ 초기단계는 저용량의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고, 향후 통행량 및 인구유입 규모에 따라 고용량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

□ 도시내 대중교통시설은 환상형 대중교통축을 중심으로 생활권별로 적정 정류장과 환승시설을 배치

○ 대중교통축은 주요 거점기능 및 주변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특색있게 구성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Transit Mall)도 설치

《 대중교통축 가로경관 예시 》

## 5. 시민친화적이며 효율적인 청사 배치

◇ 시민편의성과 행정효율성을 고려한 청사배치
◇ 개방적이고 부처별 개성을 반영한 정부청사의 건축

### 1)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개요

□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05.10.5)

□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16청 중 12부 4처 2청과 그 소속기관 등 총 49개 단위행정기관을 이전

| 구 분 | 이전대상기관 | |
|---|---|---|
| 총 계 | 49 | 12부 4처 2청 |
| 대통령 직속기관 | 4 |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 국무총리 직속기관 | 12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비상기획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영상홍보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
| 부·청단위 중앙행정기관 | 33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br>**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br>**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br>**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전기위원회<br>**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사무국, 우정사업본부<br>**보건복지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br>**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br>**건설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안전본부<br>**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br>**국세청, 소방방재청** |

□ 행정기관은 '12~'14년까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별로 이전일정을 분산·조정하여 순차적으로 이전

## 2) 정부청사 입지의 선정

□ 정부청사의 입지는 도시구조 등 거시적 측면과 접근편의성, 개발편의성 등 미시적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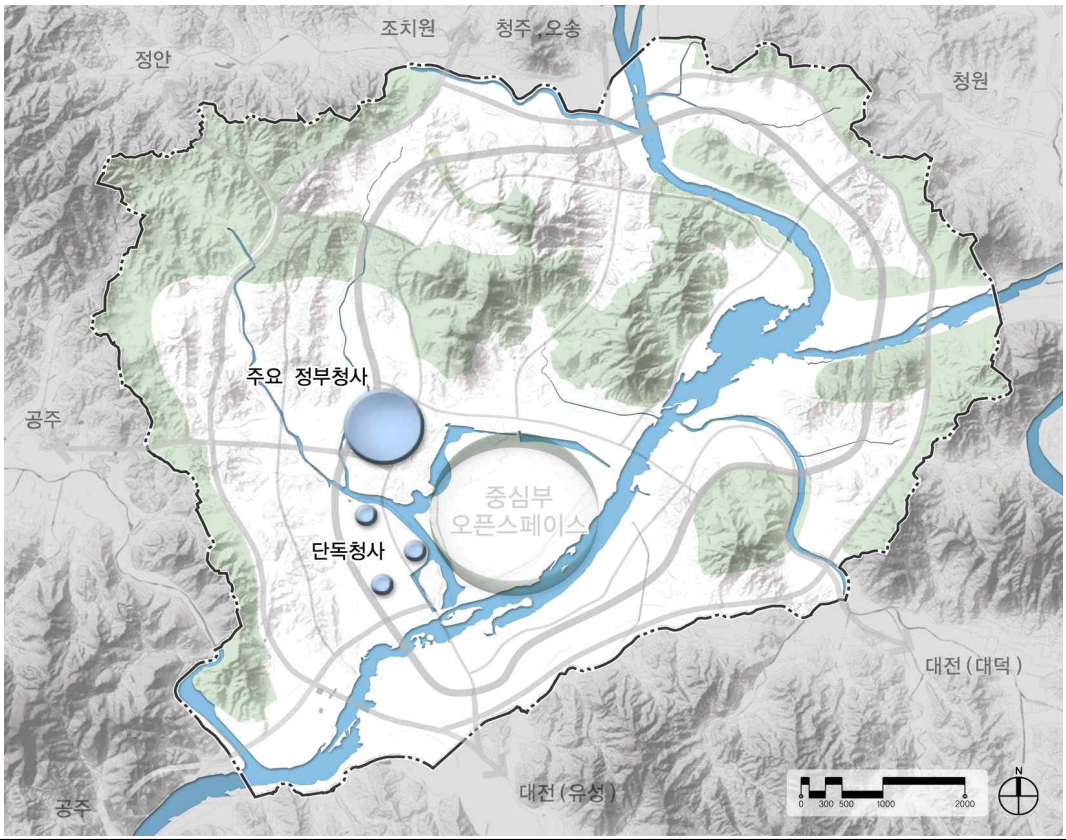
○ 종합적인 입지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입지가능지역을 선별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입지를 선정

※ 입지선정기준 : 전통적 입지상징성, 시민친화성, 환경친화적 경관잠재력 활용, 광역적 접근편의성, 도시적 기능연계성, 개발편의성, 도시활성화촉진, 안전성 등

□ 주요 정부청사는 장남평야 북서쪽 지역의 대중교통축 주변에 업무연관성을 고려하여 인접 배치

○ 단독 청사는 시민친화도 및 업무 유형을 고려하고 유관기관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정지역에 분산 배치

《 주요 정부청사 입지예상 지역 예시 》



### 3) 청사 배치의 기본방향

□ 정부청사는 기존의 행정편의적이고 폐쇄적인 배치를 지양하고 다양한 배치기준을 검토하여 개방적·미래지향적인 청사를 건립

※ 배치기준 : 시민친화도, 행정효율성, 도시기능연계성, 도시개발지원 등

○ 탈권위적이고 시민친화적인 정부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민들이 접촉하기 쉽고 다른 도시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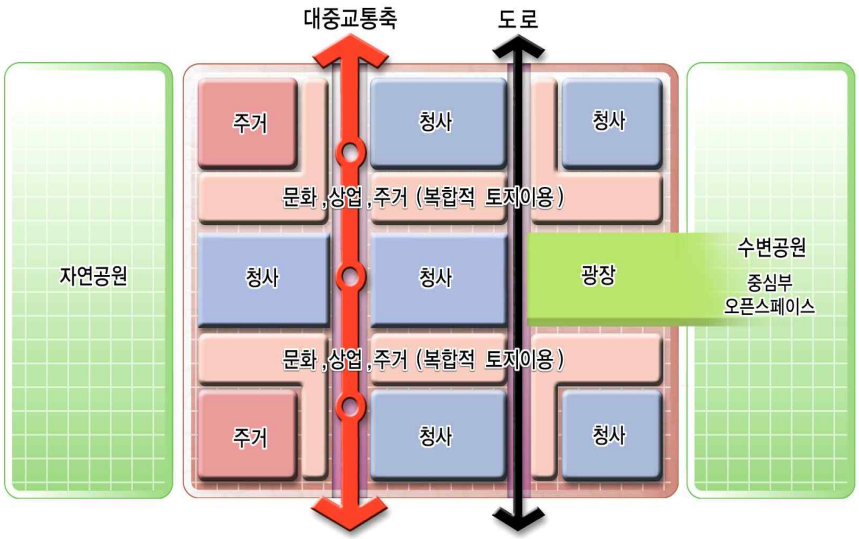
□ 시민들에게 개방적이고 친근한 청사로 건축하되 연도형으로 배치하고 주변지역에 개성과 활력을 부여하여 도시발전을 촉진

○ 획일적인 청사형태를 지양하고, 도시경관과의 전체적인 조화 및 행정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개성있는 청사를 건축

□ 정부청사 주변지역은 야간에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 상업, 문화, 주거 등의 용도와 혼합하여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적극 유도

○ 설계경기 등을 실시하여 부처별로 업무특성과 개성이 반영된 청사를 건축하고 가로활성화를 고려한 공간을 구성

《 정부청사 배치 예시 》



□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업무연관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인접 배치하고 독립성이 큰 기관은 단독으로 배치

○ 중앙행정기관을 6개 내외의 주요 기능별로 구분하고 업무연계가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인접하여 분산 배치

○ 타기능과 업무연계가 낮거나 직접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은 독립적으로 배치

《 정부부처의 기능별 인접배치 예시 》

| 기능별 | 기관명 |
|---|---|
| 중심관리기능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br>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원회,<br>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br>국가청소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 산업과학기능 |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br>산업자원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 국토관리기능 | 건설교통부, 환경부 |
| 1차산업기능 | 해양수산부, 농림부 |
| 사회복지기능 |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
| 교육문화기능 |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
| 독립배치가능기능 |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

### 4) 청사이전에 따른 행정효율성 확보 방안

□ 대통령과 국무총리간 역할분담을 통한 실질적인 책임총리제 운영 등을 검토하여 국정운영방식의 효율성을 도모

□ 원거리화상회의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 활용으로 중앙행정기관간 수직적·수평적 의사소통 및 토론을 활성화

□ 정부와 국회간 정보공유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대국회 관계에서의 행정효율성을 제고

□ 인터넷 민원처리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 접근의 필요성을 완화시키고 민간부문과의 교류증진을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개발

### 5) 시민의 이용편의성과 친화성을 고려한 도시행정기능 배치

□ 도시행정기능에 대한 시민 이용편의성과 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축 인근에 주요 시설을 집중배치

○ 대중교통축 인접지역에 시청사 등 도시행정 관련기능을 집중 배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접근이 편리하도록 함

※ 도시행정기능 예시 : 시청 및 시의회, 소방서, 보건소,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우체국, 법원, 검찰청 등

□ 도시행정기능 입지지역 주변에 공원, 광장 등 시민활동공간을 배치하여 시민의 접촉기회를 증대

## 6. 수준높은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기관 배치

◇ 연구기관간의 연계로 **국가정책연구의 시너지 효과** 제고
◇ 도시 주요기능과 연계된 **지역거점**으로 육성

□ 연관성이 높은 연구기관간 연계를 통해 연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조성

○ 연구기관간 활발한 의견교류 및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접배치하여 연구클러스터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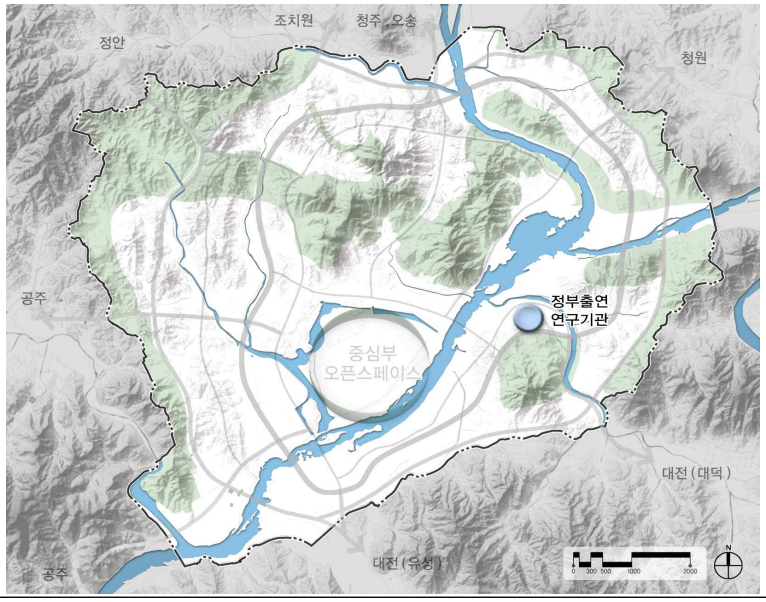
《 이전대상 17개 국책연구기관 ('06.5기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 도시의 주요 기능과 연계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여 독립된 도시내 지역거점으로 조성

○ 대학 및 연구기관, 업무기능, 중앙행정기능 등과 연계를 고려하고 대중교통을 통해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배치

《 연구기관 입지 지역 예시 》



## 7. 다양하고 질 높은 선진 교육환경 조성

◇ 미래를 열어가는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

◇ 특성화교육, 평생교육 등을 통한 **정주성·자족성 확보**

### 1) 공교육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

□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입주민의 정착기반을 마련

○ 개인의 특기·적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방과 후 교육활동 등을 활성화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

○ 국제적 이해와 안목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이중언어 교육의 점진적 도입 검토 및 전문성을 갖춘 우수교원 확보

○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율과 책무를 기반으로 하는 개방형 자율학교 등을 도입

□ U-Learning 기반의 학습체제를 구축하고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만족도를 제고

○ 학교간, 학교와 지역사회시설간 네트워크의 구축 및 정보 공유로 '정보화 교육도시'를 구축

○ 학교를 지역의 유비쿼터스 학습센터로 활용하여 입주민의 학습 및 훈련을 지원

## 2) 개인별 적성과 수준에 맞는 교육환경 구축

□ 선진국 수준의 여유있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국내 여건을 감안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03년기준)는 초등학교 34.7인, 중학교 35.2인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은 실정

※ OECD 평균 : 초등학교 21.6인(오스트리아 20.1, 프랑스 22.6, 일본 28.6)
중 학 교 23.9인(오스트리아 24.0, 프랑스 24.2, 일본 34.0)

○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 20인, 학교당 학생수 600인 수준을 목표로 추진

- 개발단계에 따라 초기단계에는 학급당 25인, 최종단계에서는 학급당 20인으로 계획

□ 학교는 기초생활권 단위로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는 2개소, 중·고등학교는 각 1개소를 배치하고, 도시차원의 특수학교도 배치

○ 취학전 아동의 교육 및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초등학교 등에 유치원을 설치

○ 초등학교는 기초생활권의 보행권내에 배치하고 중·고등학교는 학교 및 기초생활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 최적의 교육환경이 구축된 특수학교 등을 설치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장애를 해소

### 3) 수준 높은 대학교육과 평생학습체제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의 양성 및 개발을 위하여 2개소 내외의 대학 입지를 추진

○ 우수대학 입지를 위하여 대학의 통합이전, 기존대학 이전, 신규대학 설립 및 외국대학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산·학·연·관이 연계된 형태의 전문대학원 등을 설치하여 행정·연구기능 종사자의 연수를 지원하고 인적자원을 양성

○ 행정·연구기능 종사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 및 대학원의 국제교류기능 활성화 유도

□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정주성을 확보하고 교육만족도를 제고

○ 맞벌이부부, 저소득층, 여성인력 등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방안을 강구

○ 유년에서 노년에 이르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고 평생교육원 및 평생교육정보센터 등을 설립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구현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운영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운영모형을 제시

## 8. 품격높고 풍요로운 문화인프라 구축

◇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열린 문화환경 구축**

◇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기반 조성

◇ 문화인프라간 **네트워크 조성 및 관광자원화**로 이미지 제고

### 1) 커뮤니티 생활 중심의 문화·체육활동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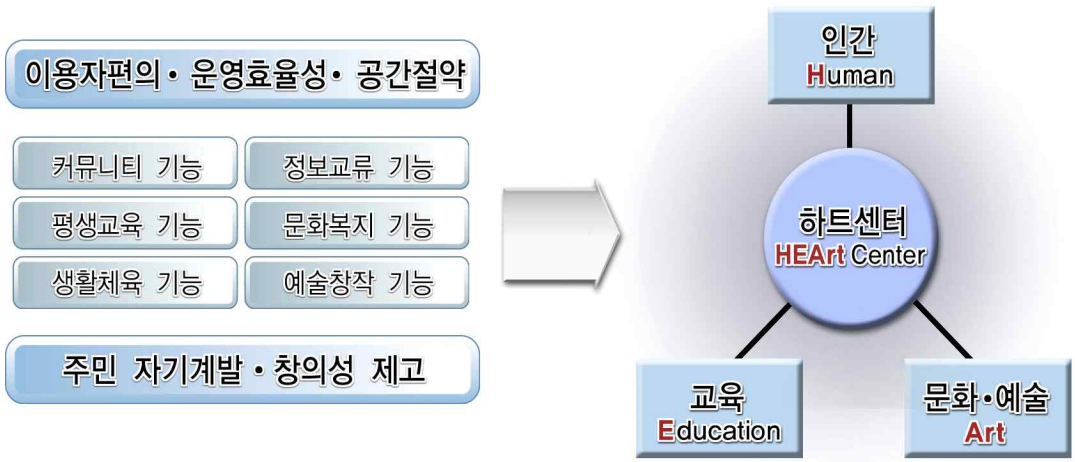
□ 기초생활권별로 다양한 문화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목적 커뮤니티시설(하트센터)을 배치

○ 주민복합문화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등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생활권 중심에 배치

※ 하트센터(HEArt Center : 커뮤니티시설)

- 인간(Human), 교육(Education), 문화·예술(Art) 등의 기능적 물리적 복합형태

《 하트센터 개념도 》



□ 지역 및 도시생활권에는 미술관·박물관, 전문공연시설, 중앙도서관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화활동을 수용

○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생산·지원하며 지식정보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도서관(첨단미디어테크)을 건립

※ 미디어테크(Mediatheque)는 도서관·서점·갤러리·멀티미디어·창작스튜디오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어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

○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전문공연시설을 건립

○ 주요상업·업무지역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예술인 등의 창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

○ 생활 속에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건강관리실, 체육센터 등의 주민친화형 체육시설을 설치

○ 운동장,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스포츠클럽, 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

○ 국제경기대회 및 종합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Complex) 등을 건립

### 2)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기반 조성

□ 전통과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고유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 도시정체성을 확보

○ 근현대의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생태생활사박물관 등을 조성하여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를 원형대로 보전

○ 도시 건설과정을 보여주는 도시역사·건축박물관 등 테마별 박물관을 건립하여 특색있는 문화환경 조성

□ 생태 및 역사문화에 기반을 둔 공공문화예술 환경을 구축하여 삶의 질을 제고

○ 도시건축 및 디자인에 공공문화예술 컨텐츠를 반영하여 특성있는 도시문화환경을 연출

○ 생태·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공공문화시설을 오픈스페이스 주변에 설치하여 열린 교육과 주민 향유의 공간으로 활용

- 도시 중심부 오픈스페이스 주변으로 시민휴식공간과 연계하여 개성있는 도시문화 및 경관 연출

○ 환경친화적이고 예술적인 전망대 및 가로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

### 3) 문화인프라간 네트워크 조성 및 관광자원화로 이미지 제고

□ 시민들의 문화활동 참여로 도시의 독특한 장소성을 창출하고 문화시설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화정보서비스체계를 구축

○ 도시 내 시민들의 문화활동·모임 및 정보교류의 장소로서 주요 광장, 공공건물 저층부 등을 열린 공간으로 조성

○ 문화정보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생활권 내 주민복합 문화센터 등을 통해 문화정보를 공유

○ 문화의 거리, 공연 및 전시공간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참여형 도시문화를 창출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연환경과 문화시설 등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등 국제적인 관광환경을 조성

○ 도시 내 보전되는 공원·녹지 및 주변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 하고 박물관·미술관·전문공연시설 등 문화시설과 연계

○ 주요 상업·업무지역 및 오픈스페이스 주변 등을 관광문화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관광자원화를 유도

○ 컨벤션센터·호텔 등 국제교류기능과 연계하여 국제회의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

## 9.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복지인프라 구축

◇ 모든 시민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건강도시 환경 조성**
◇ 다양한 계층이 **함께 모여살기 좋은 도시 구현**
◇ 안전하고 편리한 **장벽없는 도시환경 조성**

### 1) 건강도시 환경 조성

□ 모든 시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적의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 수준 높은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국내외 최첨단 의료기관과의 연계망도 구축

- 의료기관간 진료정보를 공유하고 의료시설간, 의료시설과 다중시설간 원격영상 진료체계를 구축

○ 취약계층의 진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권 중심으로 보건소 또는 보건분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설치

□ 테마거리 및 공원·광장 등을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건강한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생활권 단위 운동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

《 건강도시의 요건(WHO 권고내용, '97년) 》

①깨끗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 ②환경친화적 생태체계 ③공공부문의 주민참여와 협조 ④공공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 ⑤기본적인 생활여건 충족 ⑥다양한 경험과 정보 등의 자유로운 접근 ⑦다양하고 활력있는 경제적 여건 ⑧문화적·생물학적 유산과 현대의 조화 ⑨지역특성의 증진과 경쟁력 ⑩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⑪높은 건강 수준

## 2) 다양한 계층이 함께 모여살기 좋은 복지도시 구현

□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이 편리하고 장애인·여성이 살기 좋으며 가족이 함께 모여살기에 편리한 복지시설 조성

○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육아지원시설을 구축하고 노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요양보호시설 등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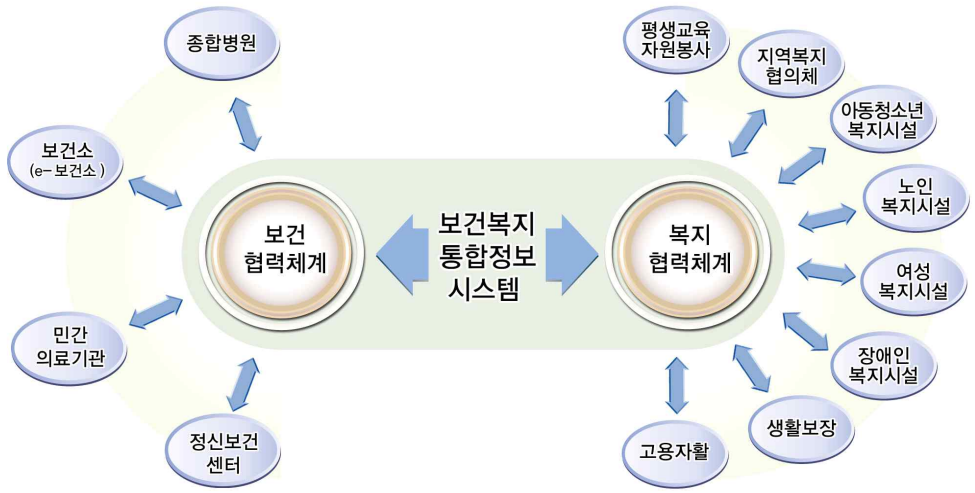
○ 아동·여성·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원스톱 보호·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장애인이 더불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

□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가 한 곳에서 해결될 수 있는 원스톱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

○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문화·교육시설 등 관련 시설과도 연계

○ 보건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보건복지정보와 서비스 연결

≪ 보건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개념 예시 ≫



### 3) 장벽없는 도시(Barrier-Free City) 환경 조성

□ 모든 시민이 물리적인 장애 없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장벽없는 도시 건설을 지향

○ 장애인·노인·아동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확보

○ 누구나 안심하고 이동이 가능하도록 보도턱 없는 거리 조성 등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 정비

○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고려

□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 조성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물리적·심리적 장벽까지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장벽없는 도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연구에 수요자인 장애인단체 등이 도시설계과정에 직접 참여

○ 교통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조성 원칙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기준(Universal Design)을 마련

○ '장벽없는 도시'에 대한 개념을 교통약자의 보행 및 이동권을 보장하는 물리적 수준에서 심리적 수준까지 확장하는 계기 마련

- 물리적 장애 뿐만 아니라 공해·소음·비인간성·계층분리 등 사회문화적·심리적 요소까지 시정

## 10. 안전한 도시를 위한 방호 및 방재계획

◇ 안보적 중요성을 감안한 **방호체계** 수립
◇ 각종 재난에 대비한 **방재대책** 수립
◇ 범죄발생을 예방하는 **안전한 도시**

### 1) 안보적 중요성을 감안한 방호체계 수립

□ 국가안보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평시 안전성과 유사시 적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호개념 도입

○ 전시·테러 등에 대비하여 주요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형, 지세 등 자연적 요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방호체계를 구축

○ 에너지, 식·용수, 의료, 정보·통신, 교통, 금융 등 중요 시설에 대해 유사시에도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도시내 주요 거점지역에 비상용수와 비상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체시설을 확보하고 안전대응체계를 확립

□ 긴급사태 발생시 국가 행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건물에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방호시설 마련

○ 주요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건축물은 안전설계수준을 상향·강화하여 적용하되 다른 기능 및 도시미관과 조화를 고려

○ 각종 테러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책도 수립

○ 유사시 시민 안전을 위하여 대피시설을 배정하고 공공건물, 대형 민간건물 및 기반시설 건설시 방호요소를 사전에 반영

## 2) 각종 재난에 대비한 방재대책 수립

□ 풍수해에 대비하여 주요 하천의 정비기준을 강화하고 하천, 저류지 등 수방시설을 종합 연계하는 광역치수계획을 수립

○ 금강과 미호천의 계획홍수량을 200년 빈도로 상향조정하고, 지형 등 여건에 따라 자연형 완경사 제방을 설치

※ 현재 건설교통부 하천설계기준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100~200년 빈도, 국가하천의 주요구간인 경우 200년 빈도 이상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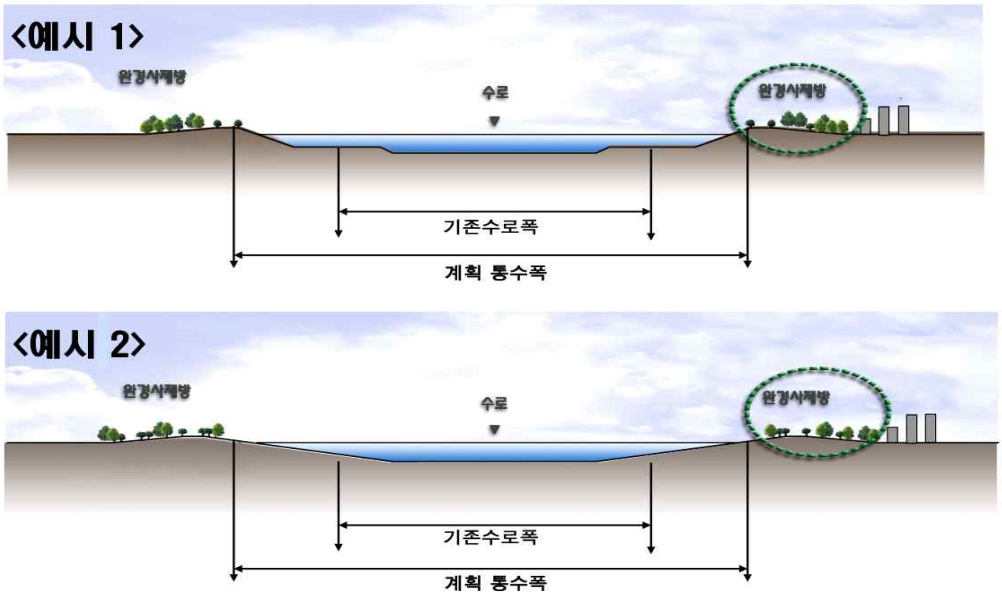
○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대지조성은 원칙적으로 내수가 자연적으로 배제되도록 하며 건축물 설계시 홍수위를 고려

※ 하수도와 하천의 연계를 고려하여 하수도계획빈도 상향조정을 검토

○ 기후변화 등에 의해 계획규모를 초과하는 풍수해를 대비하여 비구조물적 홍수대책을 검토·추진

○ 공원·녹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 및 민간시설에 우수 침투 및 저류시설 등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녹지 및 하천과 연계

《 자연형 완경사 제방 예시도 》



□ 지진 및 화재 등 기타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를 계획·설계

○ 건축물, 도시지하공간 등 건설시 방재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생활권별로 오픈스페이스, 학교 등 방재거점을 지정

○ 토지이용계획시 간선도로, 공원·녹지, 하천 등의 오픈스페이스를 적절히 배치하여 지진·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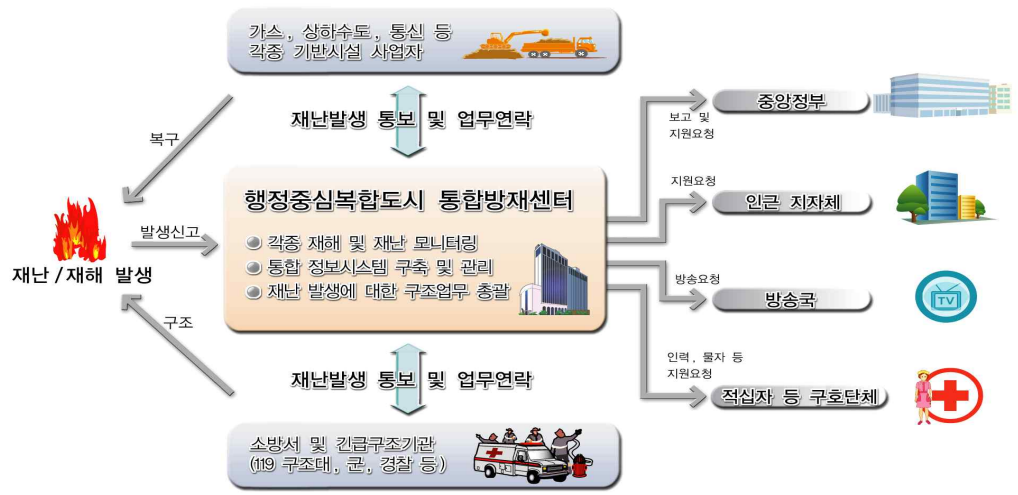
○ 재난유형별로 표준화된 방재지침을 마련하여 정부청사와 다중이용시설물, 공공시설물 건설계획 등에 반영

□ 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를 위해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재관리체계 구축

○ 사고·화재·오염 등 모든 재해·재난에 대하여 방재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종합방재센터를 설치

○ 각종 재해에 대한 예·경보,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재해·재난 모니터링 등을 종합하는 첨단 방재정보시스템을 구축

《 종합방재체계 개념도 》



### 3) 범죄발생을 예방하는 안전한 도시

□ 도시구상 단계부터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설계기법을 적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조성

○ 도시공간 조성 및 건축물 건축시 야간활동을 고려하고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공간이 조성되지 않도록 설계·건축지침 마련

○ 통행으로부터 고립된 지역 또는 시야가 제한된 사각지대 등은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고려

□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용도의 복합화 등을 통해 공동화를 방지하고 주민활동을 증진시켜 시민의 자연감시를 강화

○ 야외쉼터, 놀이시설 등 사람들이 야외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범죄유발 저감

○ 생활권 조성시 커뮤니티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범죄를 감시·예방할 수 있는 설계방안 마련

《 범죄예방설계기법 사례 》

(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주거단지나 공공시설이 자연적 감시효과·접근통제·영역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도시설계기법

- 도로의 시야선을 확보하고 볼록거울, CCTV, 비상벨 등을 설치
- 보행도로에 조명을 설치하는 등 야간조명시설 확충
- 시야가 닿지 않거나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사각지대 발생 억제
- 커뮤니티 조성을 촉진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11. 미래지향적인 첨단 정보 · 통신계획

◇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변화를 전망**

◇ **유비쿼터스도시 구현**을 위한 추진방안 및 도시정보 프로그램을 구축

□ 사람 · 환경 · 정보기술의 조화 속에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유비쿼터스도시 비전 및 추진전략을 설정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열린전자행정 · 정보네트워크 · 통합정보센터 · 정보문화비지니스 등을 추진전략으로 설정

《 유비쿼터스도시 첨단정보통신 기본개념도 》

□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이 정책결정과정 등에 참여하는 열린 전자행정을 구현

○ 전자행정시스템, 실시간오염감시, 전자민원처리 등 각종 행정업무를 정보화·지능화·통합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유비쿼터스 공공참여관리체계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행정과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 확대

≪ 열린 전자행정 개념도 ≫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누구나 제약없이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

○ 기반통신망 구축은 네트워크의 효율성·보완성 등을 고려하여 환상형 도시구조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구축

○ 도시의 단계적 개발방향·공간구조 및 기능배치·통신기술등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을 추진

□ 다양한 도시정보를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도시의 안전관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정보센터(정보허브) 구현

○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시설물별로 독립적으로 운영중인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유비쿼터스도시 기반 마련

○ 교통·에너지·환경·방재 등 도시관리시스템을 정보화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 도시통합정보센터 개념도 》

□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정보화·도시브랜드화·도시마케팅 전략 등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는 정보문화비지니스 창출

○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의 건설과정 및 고유 문화유산 등 각종 정보를 기록·분석·저장하여 고부가가치 정보 창출

○ 유비쿼터스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 창출 및 향후 타 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문화 제공

## 12.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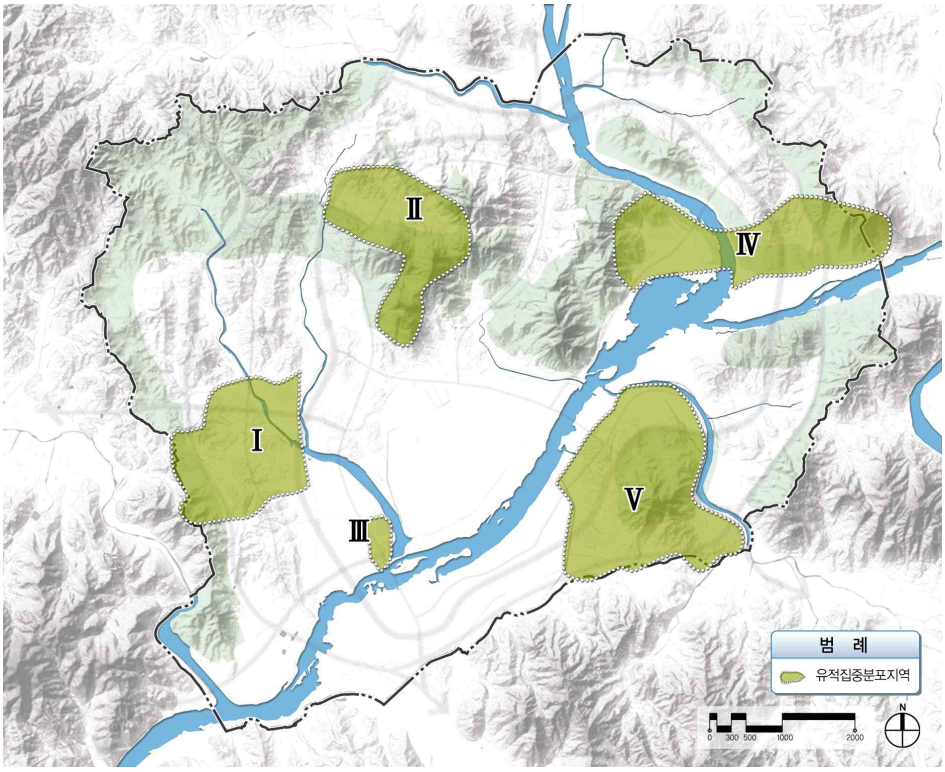
◇ 문화유산을 최대한 보존하여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역사·문화 도시를 건설

□ 지표조사 및 시·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매장·지상문화재, 역사자료 등에 대한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

○ 지표조사를 시행하여 유적·유물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유적 분포가 예상되는 지역은 시·발굴조사를 실시

○ 조사결과를 통해 발굴된 문화유산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공원이나 녹지 등으로 이전하여 관리

≪문화재 집중분포 현황≫




※ 지표조사 결과 5개 구역에서 유적이 집중 분포

| 구 역 | 주요 시대 |
|---|---|
| Ⅰ구역(당암리, 제천리) | 구석기～조선 시대 |
| Ⅱ구역(갈운리 일대) | 청동기～조선 시대 |
| Ⅲ구역(나성리 일대) | 원삼국, 조선 시대 |
| Ⅳ구역(월산리, 합강리) | 청동기, 원삼국, 고려, 조선 시대 |
| Ⅴ구역(반곡리, 석삼리, 장재리, 석교리 일대) | 청동기～조선 시대 |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기존 주민의 인류민속 유산을 조사하여 기록 및 자료화

○ 세시풍속·일상의례·신앙·지명 등 기존 주민의 생활사 등을 조사하여 인류·민속자료로 기록

○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경우 현상보존 또는 이전·관리하고 그 외 문화유산은 영상물 등으로 자료화

□ 수집된 고고역사·인류민속 자료를 보호·보존·전시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 및 테마공간 조성

○ 원형을 존치하여 주변을 공원화할 자원, 모형·사진·영상으로 제작하여 전시할 자원, 박물관 또는 역사공원으로 이전할 자원 등으로 구분하여 활용

○ 유물 중심의 전시방식에서 벗어나 박물관, 전시관, 체험공간 등이 어우러진 문화복합공간을 조성

○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이버전시관 설치, 유적편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제고

## 13. 경제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조성

◇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건설**

◇ 기반시설의 계획적 설치·운영을 통한 **도시의 효율적 관리 도모**

### 1) 공급처리시설

### □ 상수도

○ 단계적 도시발전을 대비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되 중수·우수시설 등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수공급량 절감 유도

○ '30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1일 소요 용수량은 약 15~17.5만톤으로 추정되며 안정적 상수 공급을 위한 용수 수급계획을 수립

※ '04.12 현재 전국평균 1인1일당 급수량은 365ℓ이고 '90년대 중반 이후 누수율 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30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상수 수요량을 300~350ℓ로 산정

| 연도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
| 1일 1인 전국 평균급수량(ℓ) | 409 | 395 | 388 | 380 | 374 | 362 | 359 | 365 |

※ 출처 : 환경부, 상수도 통계('05)

○ 상수 공급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또는 각각 일정 수량씩 공급받는 방안 등을 종합 검토

※ 공급의 안정성, 공급단가, 설치비용(재원부담)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정수시설은 상수 공급 방안에 맞추어 결정하고 배수시설은 소규모 분산 배치를 원칙으로 함

## □ 하수 처리 및 중수·우수 활용시설

○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하수처리 시설을 구축함과 동시에 중수 및 우수를 활용하기 위한 물순환 시스템을 조성

○ '30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목표인구를 고려할 경우 약19~22만톤/일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 하수처리장은 도시의 단계적 개발 및 하수처리구역을 고려하여 분산식으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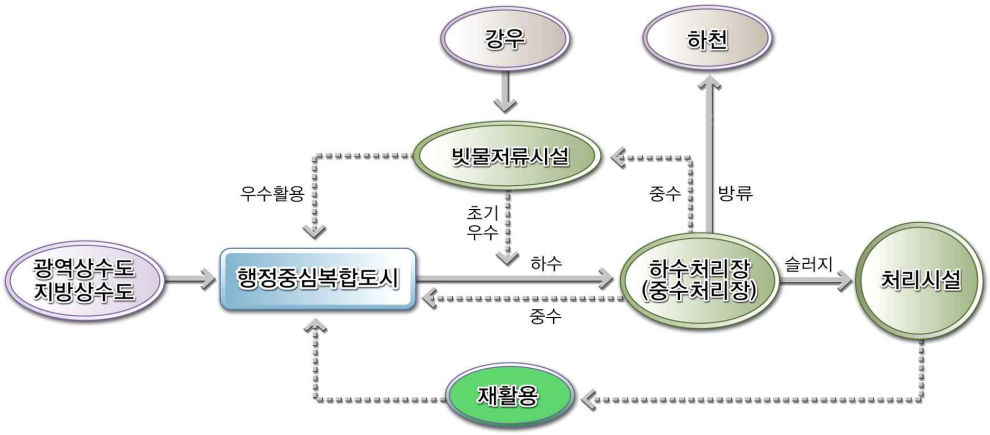
《 하수처리시설 배치방향 》

| 구 분 | | 배 치 방 향 |
|---|---|---|
| 하수처리 | 하수종말처리장 | 하수처리구역 당 1기씩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처리이용 배관거리, 경제성, 자연지형 등을 고려하여 규모 및 배치방안 결정 |
| | 슬러지처리장 |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과 연계하여 입지 |

○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공공건물, 대형건물 등에 중수도로 공급하고 세정수, 소방용수 등으로 활용

○ 우수는 하수관 유입을 억제하고 공공건물, 대형건물 등에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여 하천유지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

《 용수공급 및 처리 시스템 개념도 》



## □ 폐기물 처리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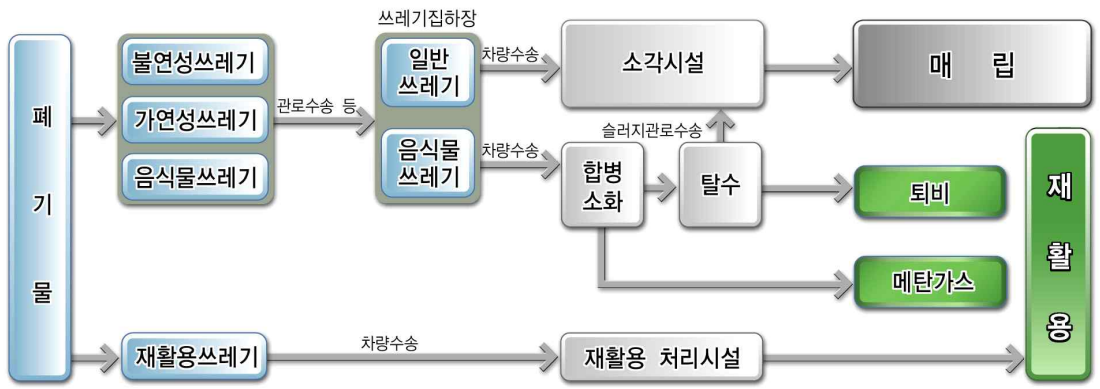
○ 폐기물을 최소화·자원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종합관리체계 구축

-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하여 에너지 회수, 나머지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

- 음식물쓰레기는 하수슬러지와 합병소화 등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후 소각 또는 퇴비화

○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는 주변지역의 환경, 처리시설의 연계성,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폐기물처리 시스템 개념도 》




| 구 분 | | 배 치 방 향 |
|---|---|---|
| 폐기물 처리 | 재활용처리시설 | 운반거리, 처리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 |
| | 재활용 수거센터 | 주민들이 쉽게 재활용품을 반납하거나 수거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에 입지 |
| | 소각장 | 열병합발전소,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장과 인접하여 입지 |
| | 쓰레기집하장 | 가급적 지하에 설치하고 상부는 공원 등으로 조성 |

## □ 에너지관리 및 공급시설

○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과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수요 관리시스템을 구축

- 도시 내 소비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계절별로 편차가 심한 부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에너지 수요관리 필요

- 전력수요관리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도입확대를 통해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적극적인 방안도 모색

- 에너지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자재 도입을 권장하고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을 마련

○ 전력, 난방 등 에너지 공급시 청정에너지(LNG 등), 자연에너지(태양광 등) 등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

○ 지역난방시설 등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도입하고 열병합 발전소를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을 제고

- 열병합발전소는 2~3개소에 분산 배치하며 각 시설의 규모는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열수요량을 바탕으로 규모를 결정

《 기반시설 복합화 》

- 환경 및 에너지 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물, 열, 폐기물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능을 통합·연계·집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하수종말처리장, 열병합발전소, 소각시설 등을 복합화하여 운영효율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

## 2) 지하매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동구 설치

□ 공동구를 설치하여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수용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

○ 각종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시발전에 따른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

※ 공동구내 설치할 시설은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 개별 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

○ 건설단계에서 공동구를 미리 설치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경감하고 각종 케이블을 지중화하여 전선없는 도시를 지향

□ 공동구는 도시 전체에 서비스를 균형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환상형 대중교통축을 따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

○ 대중교통축이 아닌 곳은 시설망의 중복이 많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경제성 및 지형 등을 감안하여 설치

《 공동구 설치 개념도 》

# Ⅵ. 사업추진방안

1. 사업추진체계
2. 단계적 개발방안
3. 건설비용 및 재원조달방안
4. 보상 및 주민지원대책
5. 주변지역 관리 및 지원방향
6.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대책
7. 건설근로자 및 건설자재 수급대책
8.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 1. 사업추진체계

## 1) 사업추진기관의 역할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시행자」 등 각 기관간에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 예정지역 등의 지정, 이전계획 · 건설기본계획 · 광역도시계획 · 개발계획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초가 될 건설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중요 업무를 주관

○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대책 등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방지조치 등을 시행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치

○ 건설기본계획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 각종 행위허가, 정부청사 · 광역교통시설의 설치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총괄 · 조정

□ 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부지조성, 기반시설공사 등 건설사업의 시행을 담당

※ 정부투자기관 중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05.5.24)

## 2)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안

□ 장기간에 걸친 도시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종합사업관리(PM : Program Management) 시스템 구축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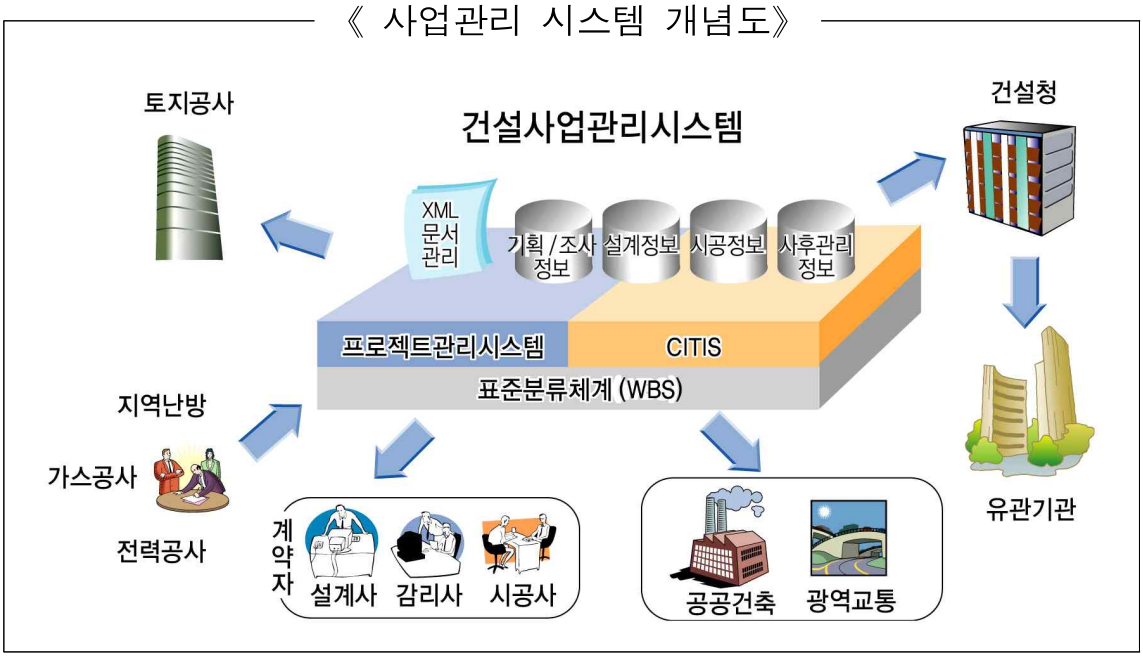
○ 다양한 참여 주체간의 역할 중복·누락 방지 및 실시간 사업 추진현황 파악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총괄·관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전과정(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일정 및 자원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PMIS : Progra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공동 구축

○ 사업추진계획과 현황을 4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이미지화하여 관리자가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공종 등의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사업주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시간 공정관리체계를 구축

《 사업관리 시스템 개념도》




※ CITIS : Contractor Integrated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 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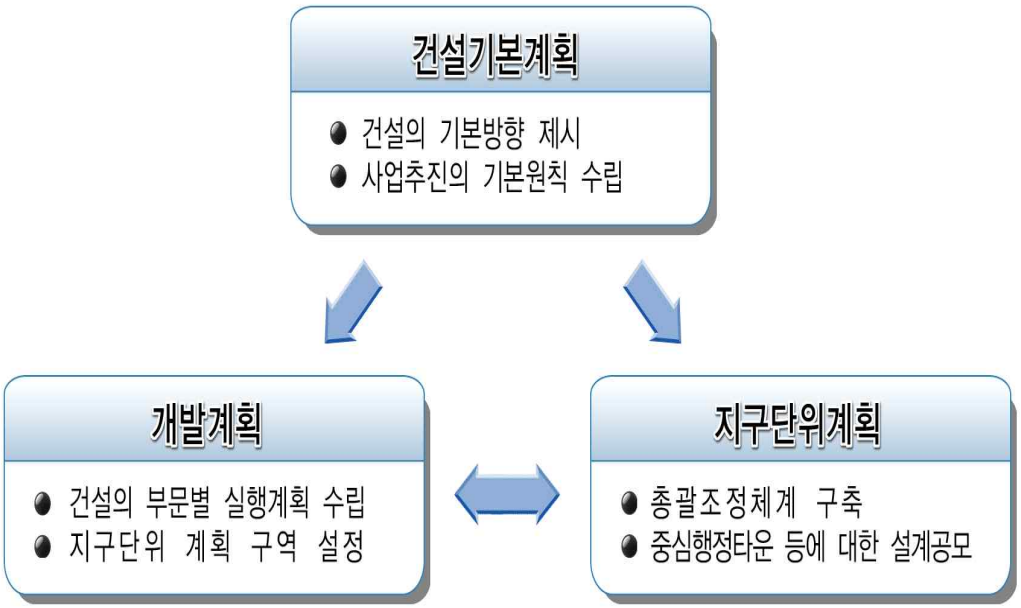
□ 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 도시 전체차원에서의 경관, 밀도,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권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 중심행정타운 및 첫마을 사업 등 생활권에 따라 설계공모·사업공모 등을 통해 다양하고 개성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 건설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 계획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시전체의 조화로운 지구단위계획 수립·조정을 위해 총괄조정체계를 구축

≪ 지구단위계획 수립 체계 ≫



## 2. 단계적 개발방안

### 1) 기본방향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장기간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기존 개발방식을 탈피하여 도시성장관리의 개념을 도입

○ 사업지역을 대단위로 분할하는 집중개발방식이 아닌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고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단위프로젝트를 순차 개발

□ '先 기반시설투자 - 後 프로젝트 추진'의 사업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추구

○ 환상형 도시구조의 조기 활성화와 후속단계의 단위프로젝트 추진여건 조성을 위해 순환교통망 구축에 최우선적으로 투자

□ 다양한 도시기능 및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규모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도시의 단계별 성장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시행·관리

○ 대중교통축상의 생활권 단위 및 중앙행정기능 등의 개별 프로젝트별로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거점개발방식을 도입

○ 도시건설은 투자의 여력, 도시성장 추이 등에 따라 시행단계별 프로젝트는 일부 중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

○ 환상형 도시구조와 함께 단계적·거점별로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각 기반시설들도 규모, 용량 등을 주요 거점별로 분산설치

## 2) 개발단계의 설정

□ 개발단계는 인구계획을 감안하되 도시기능 및 기반시설의 도입시기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구분

○ 개발단위는 원칙적으로 자족적인 일상생활 및 커뮤니티 형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활권 단위별로 설정

※ 상세한 개발단계 및 개발단위 등은 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초기 단계에는 대중교통축, 첫마을사업, 중심행정타운, 묘지공원 조성사업 등을 최우선적으로 포함하여 시행

○ 초기 입주민들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 기본적인 도시서비스 및 기반시설은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 첫마을사업의 추진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선도할 시범사업으로서 상징적이고 모범적인 주거지 커뮤니티를 개발하기 위해 '첫마을사업'을 추진

-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7천세대 규모로 개발하되, 공공시설 · 교육 · 문화 · 복지시설 등을 통합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

- 초기 입주자들의 생활과 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도시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 향후 새로운 주거문화와 모범적인 주거단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마스터플랜 등에 대하여 국제설계경기를 실시

- 첫마을사업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고 예방대책 및 처리방안을 강구

- '07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10년부터 입주를 개시하여 '11년까지 입주 및 조성을 완료

## 3. 건설비용 및 재원조달방안

### 1) 건설비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전비용상한제를 도입하여 특별법에 정부재정부담 상한선을 명시

○ 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부지매입비용 포함)과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한 지출상한을 8조 5천억원으로 특별법 제51조에 명시

《 공공부문 투입비용 추정 》

(단위 : 조원)

| 항 목 | 비 용 |
|---|---|
| 합 계 | 8.5 |
| 중앙행정관련 시설 | 2.1 |
| - 중앙행정기관 부지매입비 | 0.4 |
| - 중앙행정기관 건축비 | 1.2 |
| - 특수시설 | 0.5 |
| 지방행정관련 공공시설 | 3.7 |
| - 교육·문화·복지 등 공공시설 부지매입비 | 2.1 |
| - 공공시설 건축비 | 1.6 |
| 광역기반시설 | 2.7 |

※ '03년도 불변가격 기준의 추정치

○ 중앙행정기관 청사 등의 부지매입 및 건축, 기타 방호 등의 특수시설 등에 2조 1천억원을 투입

○ 시청, 교육청 등 지방행정 관리시설과 학교, 도서관 등 기타 공공시설 등에 3조 7천억원을 투입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로 및 철도 등과의 연계교통망확충을 위한 광역기반시설에 2조 7천억원을 투입

□ 건설비용은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할 예정

## 2) 재원조달방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정부투자는 '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투입될 계획(연평균 0.3조원 투자)

○ 투자가 집중되는 기간에도 연간 1조원 내외로 투입되므로 정부재정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재원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반시설 건설을 담당

○ 지방행정 공공시설 건설비는 시설의 성격에 따라 지자체와 분담하되, 별도 지자체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중앙정부가 부담

○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 용지매입과 기반시설을 포함한 부지 조성비용을 부담

□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운영의 효율적 관리, 건설추진의 통합 관리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수입, 지출을 통합함으로써 건설관련 회계관리를 단순화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 이전적지 활용계획 수립시 일부 정부청사가 매각되는 경우에는 매각자금 등의 활용을 검토

□ 교통·환경 등 SOC 시설 및 문화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도입하고 재정부담을 경감

○ 개발부담금제를 적용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하여 재정부담의 최소화를 추진

## 4. 보상 및 주민지원대책

◇ **토지 등의 보상은**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

◇ **이주·생활대책** 등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

### 1) 보상 방향

□ 예정지역내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

○ 보상방법은 단계적 구분없이 사전보상, 개인별 보상, 일괄보상, 현금보상 등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보상

- 예정지역내 토지, 건축물, 영업권 등 일체의 재산에 대해 보상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경우 일정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

○ 월산지방산업단지는 도시발전방향 및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전면매수하고 도시형 첨단지식산업 기능 등을 부여

※ 입주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12년까지는 임대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허용

□ 도시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현지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주·생활대책 등 주민지원대책을 강구

○ 보상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이주·생활대책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 및 합의 도출 창구로 활용

※ 보상추진협의회는 지역주민, 공무원, 사업시행자, 지자체, 학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고 협의

### 2) 주민지원대책

□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이주자택지와 생활용지 공급, 취업알선, 직업전환프로그램 마련 등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

○ 이주자택지는 그간의 획일적 공급방식을 탈피하여 단독·블록형·공동주택지 등으로 다양화

○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생활용지, 협의양도인 택지 등을 공급하고 주민희망시 상가건립 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 현지인이 협의보상금의 일정금액을 예치할 경우 상업용지에 대한 우선입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

○ 주민생계대책으로 대행기구를 통하여 지장물 철거, 분묘이장 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은행을 설치하여 공사현장, 물건조사, 매입토지 관리업무 등에 취업 알선

○ 주민의 취업 희망 업종을 파악하고 직종·직능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검토

□ 예정지역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아파트 건립 등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 지자체의 보상금을 활용하여 일정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예정지역내에 건립토록 하고 영세민에게는 임대료 인하 등을 지원

○ 공사착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예정지역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전세자금의 대출도 추진

○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노약자를 위한 경로복지관 건립 등을 추진

## 5. 주변지역 관리 및 지원방향

◇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무분별한 확산과 난개발을 방지**
◇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

□ 주변지역은 예정지역 연접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

※ 주변지역 지정 현황('05.5.24 고시) : 충남 연기군 금남·남·동·서면, 공주시 장기·반포·의당면, 충북 청원군 부용·강내면 일원 223.77㎢

□ 주변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시까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 난개발 우려가 있는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을 시행

- 다만, 공익이나 최소한의 주민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일부 허용

○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행위제한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 예정지역 등의 지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과 보조를 맞추어 조속히 수립

○ 주변지역내 대규모 집단취락 등은 근린생활권 또는 소생활권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

□ 주변지역 지정 이전에 지정된 구역 등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방향에 저촉되거나 난개발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리

○ 지역별·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 주택밀집지역 등은 집단취락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범위 내에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위를 허용

○ 호수밀도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개발이 예상되거나 주택이 밀집된 지역 등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관리

○ 취락지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한 행위를 허용

□ 주변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감안하여 생활편익,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주민들이 입는 혜택과 계획적 관리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수준 설정

《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방법 》

| 사 업 종 류 | 지 원 방 법 |
|---|---|
| 생활편익사업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그 부대사업 |
| 복지증진사업 | 주택개량, 마을회관 등의 관련시설 설치·정비 및 그 부대사업 |
| 소득증대사업 |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림·수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 등 |

## 6.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대책

□ 이전기관 종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생활편의를 위해서 주거안정 등 조기 정착방안을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중앙행정기관 49개 기관 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 등 일부 공공기관도 이전할 계획

○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주택 특별분양, 임대주택 공급, 주택자금 융자 등 주거안정지원대책을 시행

□ 이주 개시전 기본적인 도시서비스 시설을 완비하여 이전기관 종사자 및 가족들의 불편을 최소화

○ 공공 · 문화 · 의료 · 체육 · 쇼핑시설 등 편의시설도 입주시기에 맞추어 조성 · 운영하여 원활한 생활서비스를 제공

○ 충분한 교육기관을 확보하고 우수학교를 유치하여 자녀교육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육아시설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마련

□ 새로운 환경에 원만하게 적응하여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지원방안을 마련

○ 상담센터 등 이주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가족단위 이주를 촉진하는 다양한 대책을 시행

※ 미국 등에서는 재정착도우미(Relocation Management) 제도를 통해 외국인의 주택구입 · 자녀교육 · 생활요령 등을 상담, 지원

## 7. 건설근로자 및 건설자재 수급대책

□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단계별 건설근로자 수급대책을 마련

○ 숙련된 건설인력의 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건설기능인력 양성방안도 동시에 고려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서울뉴타운 등으로 인해 건설인력은 '06~15년간 매년 188~206만명 수요전망('04년 건설취업자 182만명)

□ 골재부족 등 건설자재의 수급불균형 현상 및 고갈가능성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단계별 건설자재 수급 대책을 수립

○ 환경친화적인 골재원 및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등도 고려하되 필요시 광역차원의 골재원 개발 및 비축방안을 검토

※ 국내 개발가능량이 107억㎥으로 추정되어 매년 2.3억㎥('04년) 소비시 46년간 사용가능하나 환경문제 등으로 수급불안정 가능성 우려

○ 시멘트·레미콘·철근 등 건자재의 수급은 생산능력을 감안하면 수급문제 발생 가능성은 미약

○ 지역적으로 수급이 편중되지 않도록 생산 및 물류 실태를 개선하고 충분한 물류시설 확보 등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

《건자재 수급 전망》

| 구 분 | 생산능력 | '05년 사용량 | 전망('06~'15) |
|---|---|---|---|
| 시 멘 트(만톤) | 6,760 | 5,509 | 5,436~6,244 |
| 레 미 콘(만㎥) | 41,776 | 12,714 | 12,686~15,212 |
| 철 근(만톤) | 1,266 | 962 | 964~1,115 |

## 8.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과적인 투기방지를 위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적기에 시행

○ 예정지역은 보상관계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전면적으로 협의보상 또는 수용절차에 의하여 취득

○ 부지조성 후 택지·주택 등의 분양은 실수요자 위주로 하고 일정기간 전매 및 용도변경을 제한하여 투기수요를 억제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등에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先계획-後개발' 원칙에 따라 토지이용을 엄격히 관리

○ 주변지역은 도시의 무계획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시까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개발행위를 제한

○ 외곽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을 통하여 토지이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투기우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 · 관리

○ 효과적인 투기예방 및 단속을 위해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합동단속반 편성 등 관계기관 협조체제를 구축

□ 예정지역 보상금으로 인한 주변지역 등의 지가상승 방지를 위해 채권보상, 입찰우선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유동자금을 흡수

○ 부재지주의 보상금 중 일정금액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하고 협의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상업용지 입찰우선권을 부여

# Ⅶ. 개발계획의 수립방향

1. 개발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2. 부문별 개발계획 수립방향

# 1. 개발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 1) 목적 및 근거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건설의 이념과 기본원칙, 부문별 개발방향 등을 개발계획에 연계·반영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

□ 특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건설기본계획에서 향후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2) 개발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개발 기본방향 및 공간구조 개념을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부문별 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

□ 물리적 공간 계획을 위주로 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계획을 수립

□ 특별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부문별 계획을 수립

《 특별법령상 개발계획의 주요내용 》

○ 특별법 제20조에 의해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인구수용계획,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도시문화계획, 경관계획, 환경보전계획, 교육·문화시설 및 보건의료·복지시설의 설치계획, 도로 상·하수도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재원조달계획, 예정지역 밖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담계획, 실시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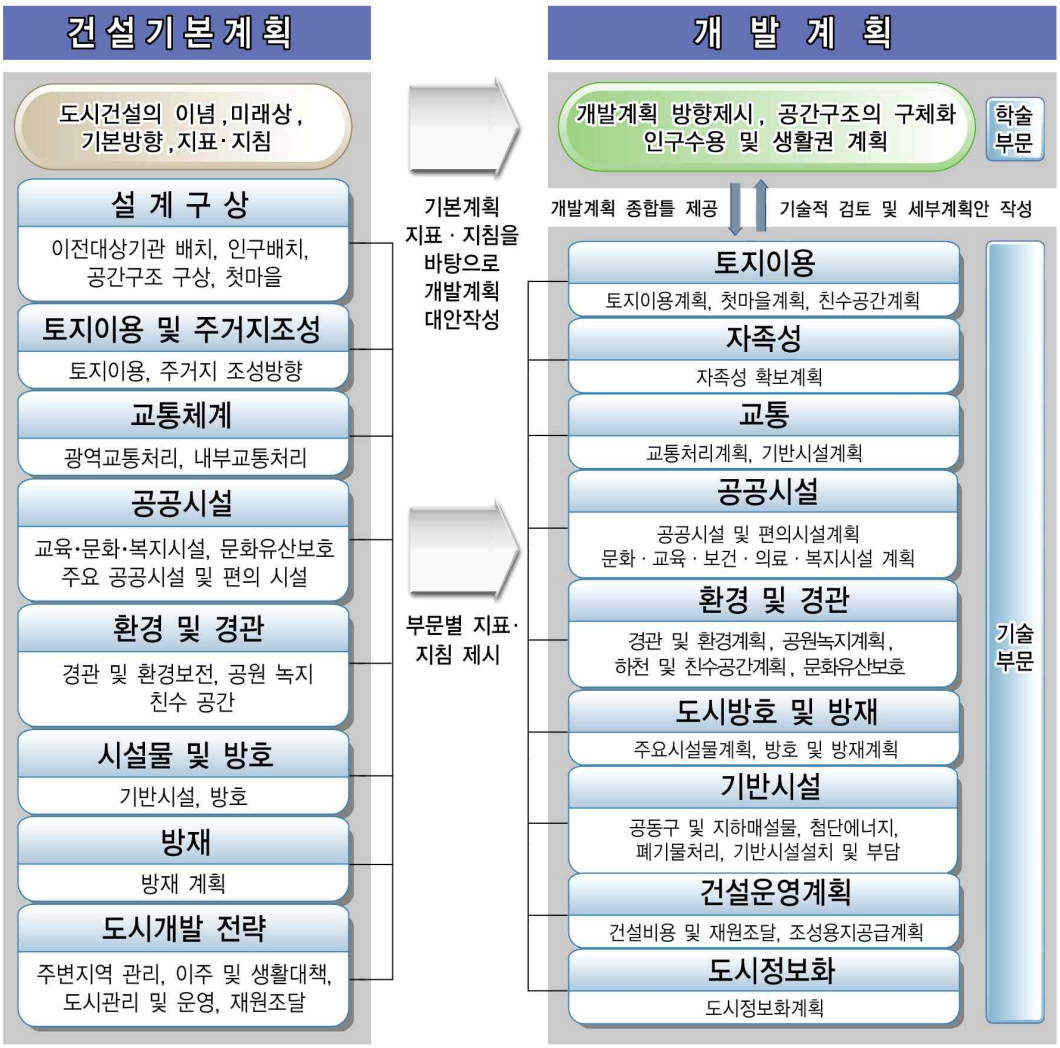
○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해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도시정보화계획, 문화재보호계획,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도시방호 및 방재계획,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 3) 건설기본계획과의 관계

□ 건설기본계획은 도시건설의 이념,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계획 기준과 지표를 제시

□ 개발계획은 부문별 계획을 통해 건설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계하여 실시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지표를 공간상에 구체화

《 건설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의 관계 》



## 2. 부문별 개발계획 수립방향

### 1) 인구수용계획

□ 건설기본계획의 공간구조 구상에 적합하고 자족적 생활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생활권단위를 설정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단계적 개발 방향을 고려하여 인구수용방안 및 생활권별 배분계획을 수립

□ 인구수용규모와 밀도, 주택유형 및 규모, 공급형태별 구상 등을 검토하여 생활권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 2)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수용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 및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배치방향에 따라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수용 및 배치계획을 수립

□ 시민친화적이고 행정능률성을 제고하면서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개성있는 청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 3) 토지이용계획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개발 기본방향과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부문별 개발방향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작성

○ 예정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발과 환경보존간의 균형을 유지하되 단계적 개발에 따른 장래 토지이용 수요변화를 수용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공간구조체계 및 생활권 단위계획에 적합하도록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 주거지역은 건설기본계획의 주거지 목표를 구체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형성 및 도시경관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계획

○ 개발단위를 고려하여 주거용지의 가구 및 획지규모를 배분하고 상호교류와 개방적인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 건설기본계획의 주거지 계획목표 등을 바탕으로 기반시설계획, 환경계획 등과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개발밀도를 결정

○ 주거유형은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미래지향적 도시환경 및 주거모델을 토대로 수요·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별로 배분

□ 상업·업무지역은 건설기본계획의 개발밀도와 수요를 감안하여 용지면적을 산정하고 경관 등을 고려하여 필지규모를 설정

○ 상업·업무기능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 생활권단위의 기초편익시설은 보행 및 자전거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되 교육·문화·복지 등 복합기능도 함께 고려

□ 공업지역은 건설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 기능 및 규모를 산정하고 주변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배치

□ 녹지지역은 건설기본계획의 녹지체계를 바탕으로 생활권별로 균형있게 녹지가 배분되고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

### 4) 교통처리계획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광역교통체계 및 내부교통체계를 고려하여 편리하고 인간중심적인 교통처리계획을 수립

○ 도시내 간선도로는 광역교통체계와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하며 도로로 인한 생활권 분리가 최소화되도록 교통처리계획을 수립

□ 대중교통체계는 환상형 도시구조 개발방향을 수용하면서 주변 주요 교통거점과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구축

○ 도시내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등은 녹지대와 연계하여 승용차 이용이 억제될 수 있도록 설치계획을 수립

### 5) 도시문화계획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문화·정보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 도시문화시설은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연관기능과의 관계를 고려해 배치하여 일상생활중심의 문화기반시설을 조성

□ 도시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상징공간 조성계획 및 창의적인 우수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시범사업지역을 제시

### 6) 경관계획

□ 공원·녹지 및 수변공간을 충분히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창출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상징적인 환상형 도시구조에 적합한 경관 요소를 도출하여 도시미관 및 가로경관 계획 수립

### 7) 환경보전계획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녹지축과 하천축의 생태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 공원은 녹지축, 하천축과 연계하여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 8) 하천계획

□ 자연적인 하천기능을 보전·복원·친수공간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의 특성을 고려한 하천정비방향을 설정

□ 국가하천 및 주요 하천변을 따라 주민의 휴식과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수(水)공간을 계획

### 9) 교육·보건의료·복지시설 설치계획

□ 교육시설은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과 법령기준 등을 고려하되 교육환경변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 시설기준을 제시

□ 건설기본계획의 방향과 지침에 따라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계획하고, 건강도시를 위한 미래지향적 인프라구축 계획을 수립

### 10) 기반시설 설치계획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기본방향을 수용하여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단계별 개발방안 등에 따라 시설별 설치계획을 수립

□ 기반시설은 상위계획과 인접 연관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

### 11) 사업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인구유입 요소를 고려하여 도시성장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사업시행기간 및 개발단계를 구분

□ 단계별 도입기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인구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단계별 도시성장에 따른 개발전략과 방안을 제시

### 12) 재원조달계획

□ 건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건설방향을 토대로 상세한 건설비용을 산정하고 다각적인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수립

□ 단계적 개발방향 및 사업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및 자금 투자계획을 수립

### 13) 실시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개발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필요한 내용을 지침으로 작성

□ 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지침과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을 설정

### 14) 도시정보화계획

□ 도시정보시스템을 도시계획·개발·관리 등 건설계획과 연계하고 수단별 유형과 기능이 고려되어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계획

□ 도시의 주요 행사, 교통, 방재 등 다양한 정보 제공과 주요 자연환경 요소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방안 제시

### 15) 문화재 보호계획

□ 보존이 필요한 주요 문화자원은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 수립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를 통하여 고고·역사·건축물 등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호계획을 수립

### 1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검토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공동구 계획을 수립

□ 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관리, 도시 경관 향상을 고려하여 공동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

### 17) 도시방호·방재계획

□ 국가안보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평시 안전성과 유사시 적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호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

□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비상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을 제시

### 18)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 열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여부 및 복합화 설치계획 등에 대한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

□ 전력·가스·난방열 등의 단계적 수요예측, 적정 공급방안을 검토 반영하고 에너지 절감 및 수요관리를 감안한 신재생에너지 등의 도입방안을 제시

□ 에너지 절약정책 추진의지를 시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의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에너지 절감방향을 제시